

Vol.20
2022. 12. winter

겨울호



KOSTAT

통계플러스



<http://sri.kostat.go.kr>

- + 이 슈 분 석
 - 한국인의 행복, 무엇을 해야 할까?
 - 지난 25년, 우리가 사는 집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
- + 통 계 프 리 즈
 - 국민 암 예방수칙에 대한 인식 및 실천행태
 -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리 집 소비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 코로나19가 중소기업에 미친 영향
- + SRI 리서치 노트
 - 데이터 경제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 + 통 계 포 커 스
 - 통계데이터센터 알아보기



통계청
통계개발원

통계개발원(SRI)은

2006년 국가통계전문 연구원으로 설립되어 국가통계 발전과 혁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가통계는 증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 · 이행 · 평가의 초석입니다. 이를 위해 통계개발원은 선진 통계 및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국가통계를 개선 · 개발 · 혁신시킬뿐만 아니라 경제 · 사회 현상을 심층 분석하는 등 데이터 기반 정책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통계개발원은 국내 유일의 국가통계 싱크탱크로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이며 실용적인 연구를 통해 국가 통계의 미래와 데이터과학의 활용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Contents

K O S T A T S t a t i s t i c s P l u s

칼럼

Column

- 02 가구 조사의 과거, 현재, 미래
공미숙

이슈분석

Issue analysis

- 06 한국인의 행복, 무엇을 해야 할까?
김성아

- 18 지난 25년, 우리가 사는 집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
현대환 · 최은영

통계 프리즘

Statistics prism

- 36 국민 암 예방수칙에 대한 인식 및 실천행태
김병미 · 오진경

- 46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리 집 소비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손경국 · 이봉희

- 56 코로나19가 중소기업에 미친 영향
: 중소기업 기본통계 심층 분석
오정화 · 한창용

SRI 리서치 노트

SRI research note

- 68 데이터 경제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변준석

통계 포커스

Statistics focus

- 80 통계데이터센터 알아보기
오승철 · 최진성

발행처 통계개발원 발행인 통계개발원장 편집위원장 김진 편집위원 김현식, 이경상, 홍성효 편집인 배준형 간사 문범주
정기간행물등록 11-1240245-000062-08 ISSN 2586-6486 출판일 2022년 12월 23일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통계개발원 8F
전 화 042-366-7103 팩 스 042-366-7123 홈페이지 <http://sri.kostat.go.kr> 디자인 및 제작 나래기획 (042-226-2568)

※ 「KOSTAT 통계플러스」에 바라는 점이나 국가통계 개발 또는 개선을 위해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의 온라인간행물, 통계개발원 홈페이지(<http://sri.kostat.go.kr>)의 「KOSTAT 통계플러스」 코너를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지의 내용은 통계개발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가구 조사의 과거, 현재, 미래

Column



사회통계국장 공미숙

가구 조사는 모집단인 전체 가구를 조사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Census)와 모집단을 대표하는 일부 가구를 조사 대상으로 하는 표본조사(Sample Survey)로 구분된다. 표본조사는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고, 확률적·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설계되면 정확도가 높은 조사 방법이다. Kaier(1895)가 표본조사의 대표성을 거론했고, 그 뒤에 Neyman(1934)이 확률추출 방법을 이론적으로 정립했다. 국가통계 작성 기관은 대부분 확률추출 방법으로 조사를 설계한다. 확률추출 방법은 표본 단위를 무작위로(randomly) 추출하고, 각 단위의 선택확률을 계산할 수 있어 모집단에 대한 통계적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가계동향조사 등 19종의 가구 조사 통계를 확률추출로 설계하여 조사하고 있다.

최근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로 통계조사 불응률이 높아지는 추세인데,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불응률은 2010년에 5% 수준이었으나 2020년에는 11%까지 올라서 10년 동안 2.2배가 되었다. 가계동향조사 불응률은 2010년에 18%에서 2020년에 32%로 1.8배가 높아졌다. 불응률이 점차 높아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맞벌이 가구 또는 고소득자 등 특정 계층의 불응률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올라가 조사에 체계적 편향성이 생겨 추정의 정확도가 더 떨어지는 것도 문제이다. 각국 통계청에서는 불응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 다양한 방법이 결합된 조사 방법 도입, 무응답 처리에 필요한 이론 정립 등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가구 조사를 통해 한층 다양하고 세부적인 하위집단 자료와 실시간 통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자료를 얻기 위한 표본 수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통계작성을 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다.

따라서 행정자료를 활용하면 대표성 확보의 어려움이라는 가구 조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특히 전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활용하는 빈도가 점차 늘고 있다. 행정자료를 사용하면 조사자료 또는 자료 간 결합을 통해 다양하고 세부적인 하위 집단 자료를 얻을 수 있고, 종단면 패널분석도 가능해진다. 또한 행정자료는 조사자료의 항목 대체, 무응답 조정을 위한 벤치마크 및 소지역 추정치 보조변수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미 북유럽 국가들은 가구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행정자료로 센서스를 완전히 대체하여 조사비용을 줄였고, 그 덕분에 세분된 지역 및 특성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행정자료를 활용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율성을 입증했다. 이처럼 행정자료는 다양한 방식으로 더욱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행정자료가 특정한 계층만 포함하거나 목표모집단을 완전하게 포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과 행정자료의 특성상 오차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용해야 한다.

최근 실시간 통계에 대한 대규모 수요 증가로 전통적인 접근 방식의 전환 가능성이 높아졌다. 과거에는 온라인 표본조사나 할당표집 등 비확률추출법은 통계적 추론의 한계 때문에 국가 공식 통계에서 사용되지 않았다. 온라인 표본조사는 모집단의 구성원들이 같은 확률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고, 할당표집은 할당된 층에서 응답자를 선택할 때 편향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온라인 표본조사나 할당표집은 조사비용이 저렴하고 조사속도가 빠르다는 장점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비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가중치 조정법을 통한 추정 방법, 확률표집과 비확률표집의 혼합조사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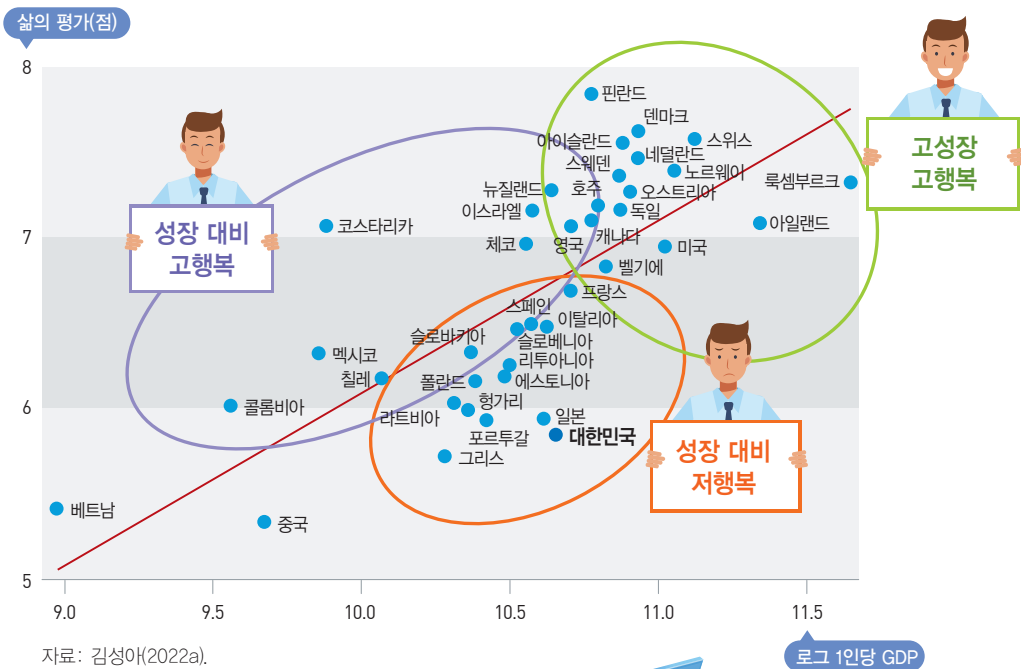
대표적인 사례로 ‘캐나다 코로나19 영향조사(Impacts of COVID-19 on Canadians)’는 통계청 웹페이지에서 지원자를 받아 표본조사를 실시했으며, 향후 고품질의 표본조사를 실시할 때도 이 방법을 적용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또한 미국여론조사협회(AAPOR)는 공표를 위한 비확률 표집의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앞으로 가구 조사 불응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므로 이 문제에 대비하여 무응답 관련 조사 및 추정 방법을 연구하는 동시에 행정자료 활용 방법 등을 준비해야 한다. 최근 통계청이 주축이 되어 전 국민 등록기반 행정자료 구축 작업, 장기간 종단 행정자료와 표본조사 자료의 연계 작업, 행정자료를 이용한 실험적 통계작성 등을 하고 있으며, 향후 행정자료가 각 분야에서 더 활발히 이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가구 조사가 실시되는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온라인 표본조사 및 비확률표집으로 이루어지는 조사가 새로운 조사방식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인의 행복, 무엇을 해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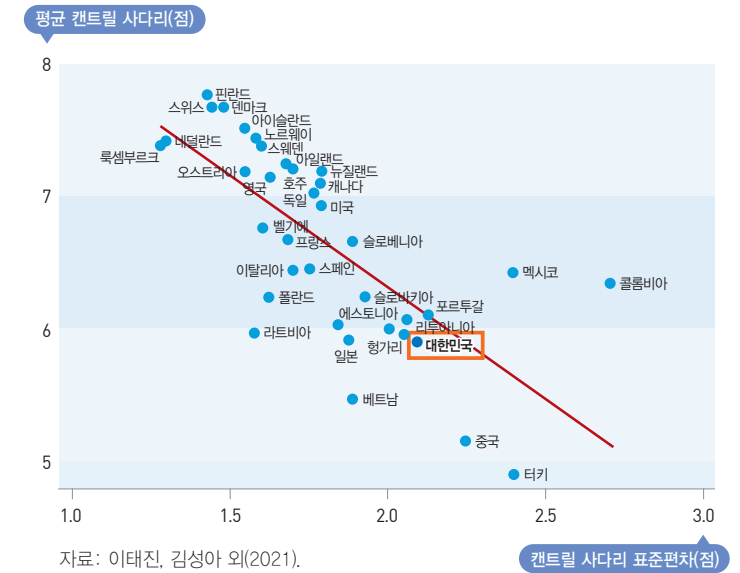
주요국의 경제적 성과 대비 행복 수준

경제성장 수준도 높고 국민도 행복한 나라들이 있다. 복지 선진국가들이 여기에 있다. 경제성장 수준에 비해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들도 있다. 중남미 국가들이 여기에 있다. 한국은 경제성장 수준 대비 국민들의 행복 수준이 낮은 국가군에 속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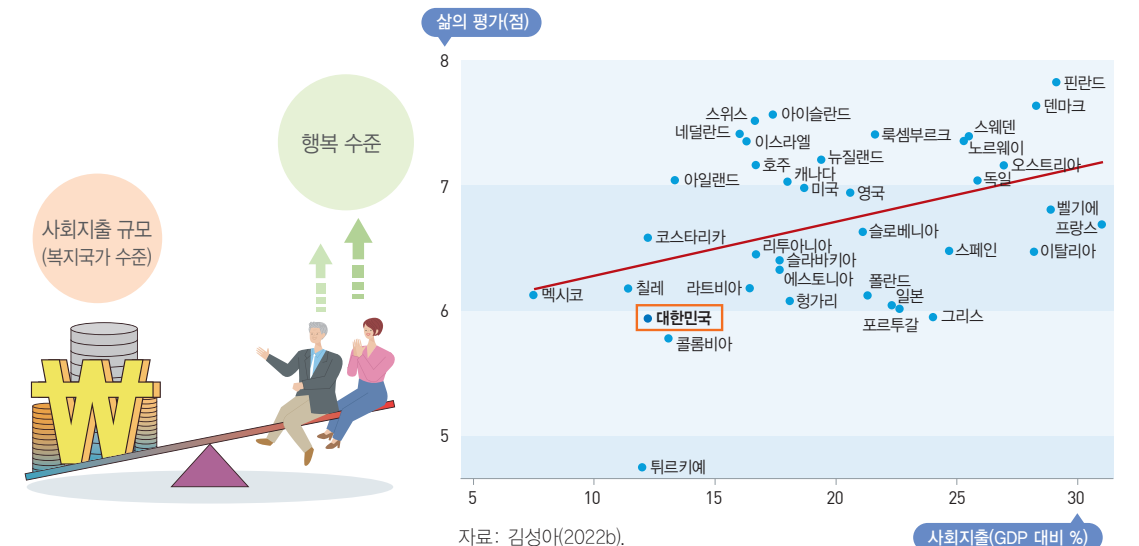
주요국의 행복 불평등과 행복 수준

행복 불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즉 행복한 사람과 덜 행복한 사람 간의 격차가 클수록 행복 수준이 낮다. OECD 가입국 중에서도 국민들의 행복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은 행복 불평등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



복지국가와 행복

사회지출 규모로 측정하는 복지국가 수준이 높을수록 국민들이 누리는 전반적인 행복 수준이 높다. 그런데 행복 수준이 낮은 한국은 OECD 가입국 중에서 복지국가, 즉 사회지출 규모가 낮은 편이다.





한국인의 행복, 무엇을 해야 할까?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정책학 박사
kseonga@kihasa.re.kr

한국은 경제성장 수준 대비 국민들의 행복 수준이 낮은 국가군에 속한다.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국민들의 행복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은 행복 불평등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다. 여기에서는 한국인의 행복 수준을 증진하기 위해 덜 행복한 행복 취약계층이 누구인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노인, 특히 75세 이상의 후기 노인, 고졸 이하의 비교적 학력이 낮은 집단, 일용직 임금근로자나 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 1인 가구,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에 불만족하는 집단, 가구 소득이 낮은 저소득 집단이 행복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 취약계층의 삶의 여건을 개선하고 이들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통계 관리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복지국가의 역할이 요구되는 때이다.



I. 들어가며

한국의 고속성장은 세계사에서도 보기 드문 일이다. 한국전쟁 이후 개발도상국으로 선진국의 원조를 받았지만 이제는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에 이르고¹⁾ 2021년에는 선진국 반열에 들기도 하였다.²⁾ 출생 시 기대여명은 83세 정도로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상위권이다.³⁾ 기본 시설이 없는 주거에 사는 가구의 비율은 0.7% 정도로 이 또한 OECD 회원국 중에서 낮은 편이다.⁴⁾ 적어도 국제비교 관점에서 현세대 한국인이 누리는 물질적인 삶의 수준을 낮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한국인이 보고하는 행복의 수준은 다르다. UN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U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UN-SDSN)에서 발표하는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에 따르면, 한국인이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행복 수준은 세계 50~60위권에 머무른다. 경제 발전 수준과 비교하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사실 행복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동양에서는 복(福)을 누림으로써 육체적인 행복과 중용적으로 조화되기를 추구하였고, 이를 현대적 언어로 행복이라고 부른다. 이 맥락에서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복’을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과 거기서 얻는 행복”으로 정의한다.⁵⁾ 서양의 행복론은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출발한다. 에피쿠로스학파는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할 것을 말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삶(Eudaimonia) 철학에 바탕을 두고 공동체에서 시민으로서 누리는 행복을 논한다.

현대 행복 연구에서는 추상적인 개념이자 개인 단위의 경험으로서의 행복을 측정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심리학적 전통에서는 행복감(happiness)이나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을 주로 활용하지만, 행복경제학 전통에서는 삶에 대한 평가(life evaluation)나 삶에 대한 의미(Eudaimonia)를 측정하기도 한다. 「세계행복보고서」에서 공개하는 행복 점수는 삶에 대한 평가이다.

1) IMF World Economic Outlook(2022. 10), “GDP, Current Prices”(검색일: 2022. 10. 15).

2) 외교부 보도참고자료(2021. 7. 4.), 대한민국,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선진국 그룹 진출.

3) OECD(2022b), “Life Expectancy at Birth (indicator)”(검색일: 2022.1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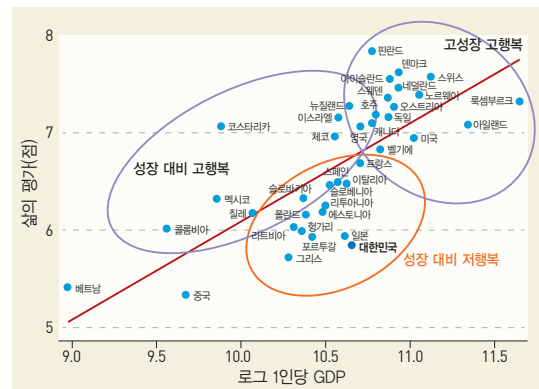
4) OECD(2022a), “Housing Conditions, Percentage of Households Living without Indoor Flushing Toilet”(검색일: 2022. 10. 15).

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복”(검색일: 2022. 10.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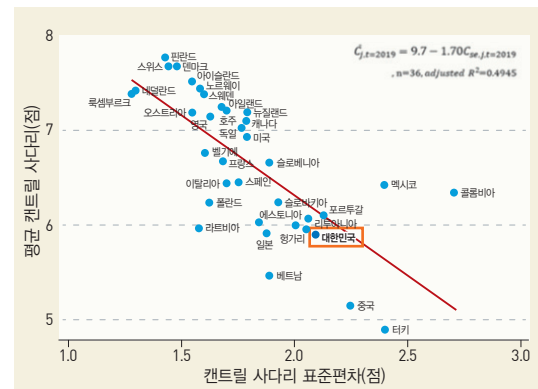
행복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실태를 보면 [그림 1]과 같다. 경제성장 수준도 높고 국민도 행복한 나라들이 있다. 복지 선진 국가들이 여기에 속한다. 경제성장 수준에 비해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들도 있다. 중남미 국가들이 여기에 속한다. 한국은 경제성장 수준 대비 국민들의 행복 수준이 낮은 국가군에 속한다. 압축성장이라는 이례적인 성과를 보이는 현시점에 이르러, 한국인의 행복에 다시 주목해야 할 때이다. [그림 2]는 행복의 불평등과 행복 수준을 비교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행복 불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즉 행복한 사람과 덜 행복한 사람 간의 격차가 클수록 행복 수준이 낮다.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국민들의 행복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은 행복 불평등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 한국인의 행복 수준을 높이려면 덜 행복한 행복 취약계층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행복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조건을 우선 탐색하고, 덜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한다. 그리고 행복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한국인의 행복 수준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그림 1] 주요국의 경제적 성과 대비 행복 수준



자료: 김성아(2022a).

[그림 2] 주요국의 행복 불평등과 행복 수준



자료: 이태진, 김성아 외(2021).

한국인의 행복,

무엇을 해야 할까?



II. 한국인, 누가 행복할까? ●●●●●●

“교육 수준이 높으면, 직업이 안정적이면, 소득이 많으면 사회적 관계에 만족하면 행복 수준이 높다”

행복한 사람들의 평균적인 조건들이 있다. 다음 [표 1]은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정형화된 사회경제적 조건들⁶⁾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 전반적인 생활 만족 수준과 함께 칸트릴 사다리(Cantril Ladder)로 측정하는 삶의 평가 점수를 활용하였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행복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다. 나이에 따른 행복 수준은 선형이라기보다 비선형 관계에 가깝다. 생애주기와 무관하게 일정 수준의 행복을 누리거나, 나이가 들수록 행복 수준이 일정하게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등 단순한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 청년기와 중장년기, 노년기의 발달 과업이 상이하고, 이에 따른 경험과 대응이 다르기 때문에 행복 수준은 변화한다.

교육 수준을 보면, 고졸 이하의 사람들에 비해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한 사람들의 행복 수준이 높다. 대학이나 대학원 졸업 이상의 교육 수준을 가진 사람들의 행복 수준은 고졸 이하의 집단에 비해 높지만,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다소 낮다. 이는 생애주기에 따라 교육을 마친 이후에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 일상에서 행복을 누리기에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종사상 지위에 따라서는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행복 수준이 가장 높다. 회귀계수의 절댓값 중심으로 보면, 학생이나 주부, 군인 등 비경제활동인구나 무급가족종사자의 행복 수준과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행복 수준 차이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 특히 일용직 임금근로자, 공공근로 종사자, 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의 행복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일자리의 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

6) 상세한 내용은 이태진, 김성아 외(2021), 제2장을 참조.

[표 1] 한국인의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2)
		전반적 생활 만족	삶의 평가
여성 (남성=0)		0.023*** (0.007)	0.076*** (0.020)
만 나이		-0.003** (0.001)	0.027*** (0.003)
만 나이 제곱(/100)		0.004*** (0.001)	-0.026*** (0.003)
교육 수준 (고졸 이하=0)			
	대학(원) 재학	0.126*** (0.019)	0.420*** (0.056)
	대학(원) 졸업 이상	0.072*** (0.008)	0.350*** (0.024)
종사상 지위 (상용직 임금근로자=0)			
	임시직 임금근로자	-0.075*** (0.010)	-0.267*** (0.031)
	일용직 임금근로자	-0.182*** (0.018)	-0.549*** (0.054)
	공공근로(자활근로, 노인일자리 등)	-0.044+ (0.022)	-0.477*** (0.068)
	고용주	-0.113*** (0.022)	-0.207*** (0.062)
	자영업자	-0.075*** (0.012)	-0.243*** (0.036)
	무급가족종사자	-0.086*** (0.022)	-0.181** (0.061)
	실업자	-0.195*** (0.029)	-0.560*** (0.081)
	비경제활동인구	-0.067*** (0.010)	-0.250*** (0.030)
로그 균등화 가구 처분가능소득		0.095*** (0.007)	0.326*** (0.023)
가구원 수		0.004 (0.003)	0.044*** (0.009)
사회적 관계 만족		0.548*** (0.007)	0.880*** (0.018)
연도 고정효과		Yes	Yes
상수항		0.897*** (0.061)	-0.261 (0.188)
N		44685	44685
조정 R ²		0.369	0.213

주: 1) 15세 이상 성인 대상임.
2) 표준화 가중치를 적용함.
3) 1보다 작은 처분가능소득은 1로 치환한 후 로그로 변환함.
4) 괄호 안 수치는 오차항의 이분산성에 강건한 표준오차임.
5) *p<0.1,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2020), 「한국복지패널」 제12~16차.

소득은 많을수록 행복 수준이 올라간다. 개인들이 원하는 삶의 여건을 획득할 수 있는 경제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교육 수준이나 일자리의 질, 사회적 관계 등이 여전히 유의하게 개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높은 소득은 행복의 필요조건일 수는 있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많은 가구원 수는 행복 수준에 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개인이 삶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이것이 영향을 준다. 같은 맥락에서 사회적 관계에 만족할수록 행복 수준이 높다. 사회적 관계 만족의 회귀계수가 다른 변수의 회귀계수에 비해 상당히 높은 점에 주목할 만하다. 교육 수준이나 일자리, 소득과 같은 경제적 기반이 행복한 삶에 중요한 바탕이 되는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행복한 삶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보이는 요인은 사회적 관계이다. 따라서 행복하기 위해 물질적인 성장만을 추구한다면 사회적 관계 같은 부분을 놓치기 쉬울 것이다.

Ⅲ. 한국인, 누가 덜 행복할까?

“덜 행복한 국민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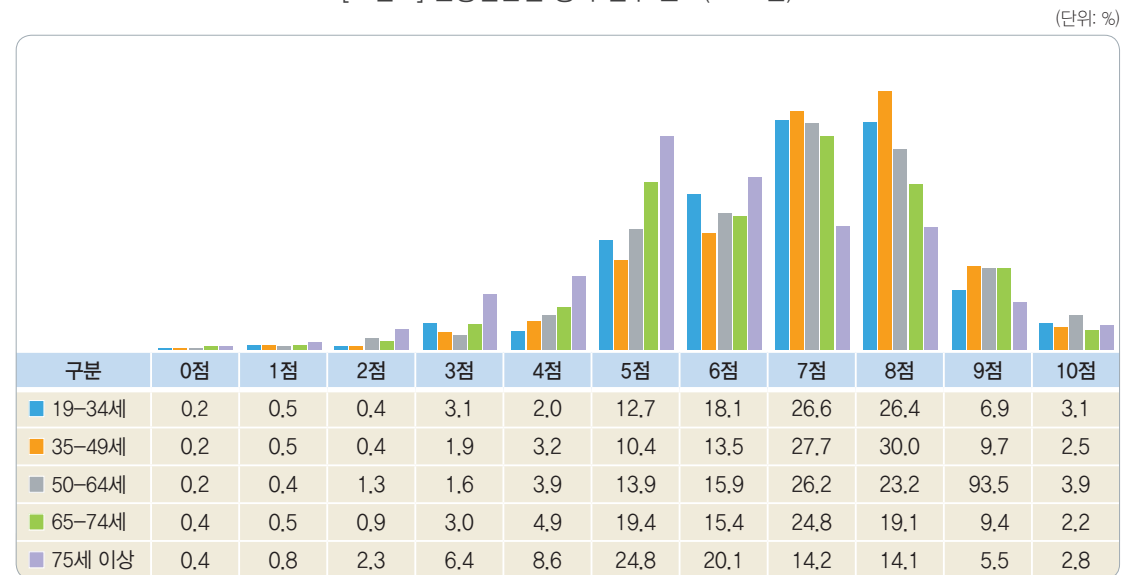
더 행복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여건을 살펴본 데 이어 누가 덜 행복한지, 행복 취약계층이 누구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덜 행복한 행복 취약계층을 식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탐색하기보다 주요 집단별 행복 점수의 분포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한국인의 행복 통계 생산 및 관리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를 확인한다.

[그림 3]에 따른 연령집단별 행복 점수를 보면, 35~49세 장년 집단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7, 8점의 비교적 높은 점수를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노인, 특히 75세 이상의 후기 노인 집단은 1~5점 범위의 상대적으로 낮은 행복 점수를 응답한 비율이 높아, 평균적인 행복 수준 또한 낮다. 전체적으로 0점의 가장 낮은 점수를 응답한 연령집단은 19~34세 청년부터 50~64세 중년집단까지는 0.2%, 65세 이상의 노인 집단은 0.4% 수준에서 분포하고 있다. 최고 점수인 10점을 응답한 19~34세 청년은 3.1%, 50~64세 중년은 3.9%이지만, 65~74세 초기 노인은 2.2%, 75세 이상의 후기 노인은 2.8%로 낮았다. 장년기의 생애 부담과 노년기의 여러 경험 때문에



이들 연령집단의 행복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 35~49세 장년 중 10점을 응답한 비율이 2.5%로 노인 집단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7~9점의 높은 행복 점수를 응답한 비율이 장년층이 상대적으로 높아 행복의 관점에서 보면 연령집단에 따른 취약계층은 노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3] 연령집단별 행복 점수 분포(2020년)



주: 삶의 평가 점수임.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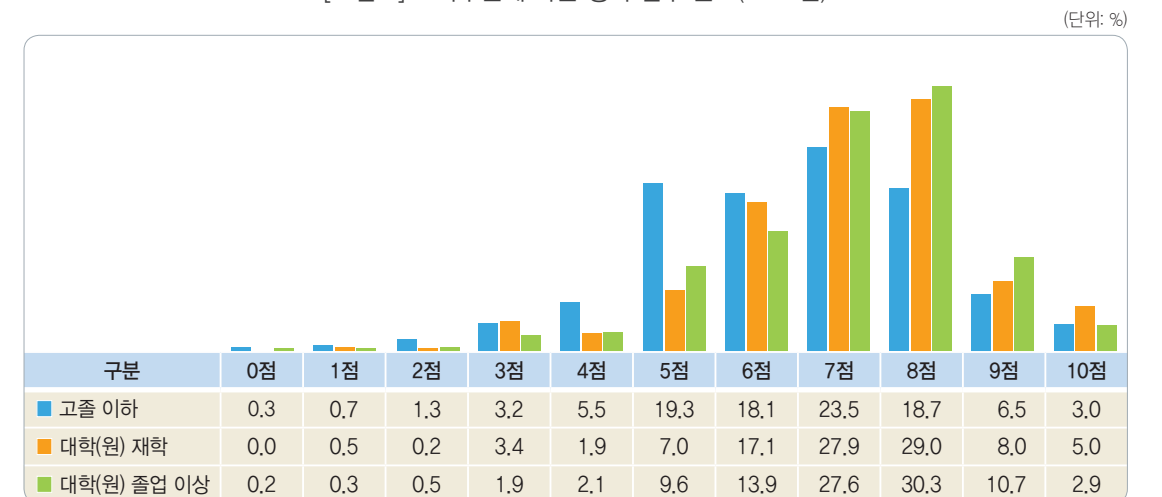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한국복지패널」 제116차를 토대로 저자 분석 및 재구성.

[그림 4]와 같이 전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 수준이 높다. 고졸 이하의 집단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5점 이하의 상대적으로 낮은 행복 점수를 응답한 비율이 높는데, 특히 0~10점 리커트 척도에서 중간값인 5점의 응답률이 높다. [표 1]의 회귀계수에 따라 대학이나 대학원 재학생의 행복 수준이 높는데, [그림 4]에 따르면 이들의 행복 점수가 7~8점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이들이 10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다. 반면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집단에서는 8~9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아, 이들은 비교적 높은 행복 수준을 보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5]는 가구원 수에 따른 행복 점수 분포를 보여 준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5점 이상의 상대적으로 높은 행복 점수를 응답한 비율이 높다. 주목할 집단은 1인 가구이다. 1인 가구는 다른 집단에 비해 1~6점까지 상대적으로 낮은 행복 점수를 응답한 비율이 높고, 7점 이상에서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가장 높은 10점을 응답한 집단은 5인 이상인 가구를 제외하고 1~4인 가구 모두 비슷하였지만, 결과적으로 1인 가구가 행복의 관계에서 취약한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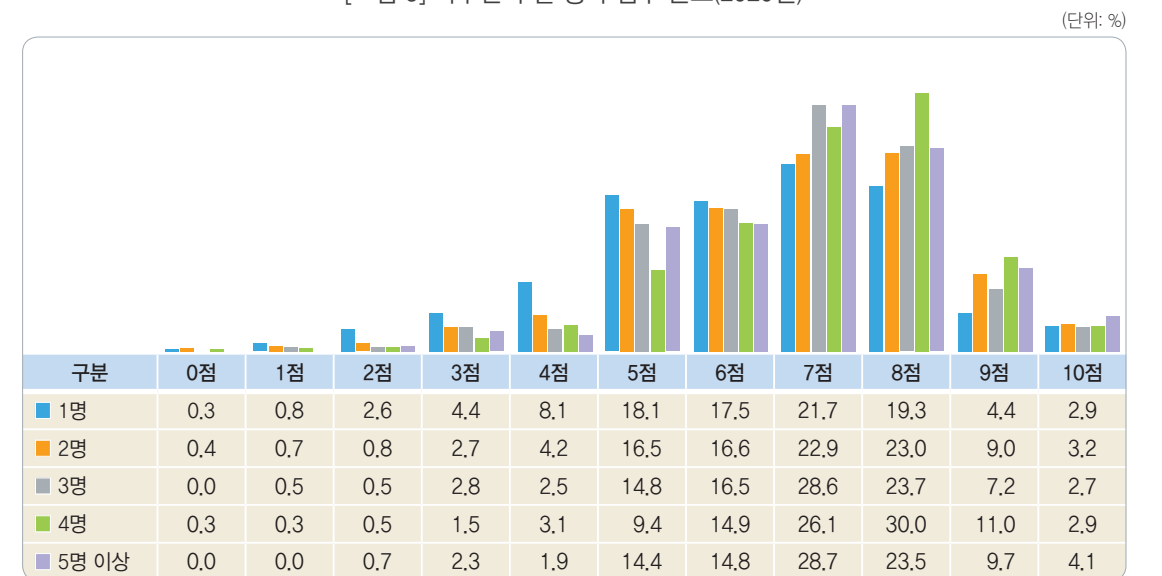
[그림 4] 교육수준에 따른 행복 점수 분포(2020년)



주: 삶의 평가 점수임.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한국복지패널」 제116차를 토대로 저자 분석 및 재구성.

[그림 5] 가구원 수별 행복 점수 분포(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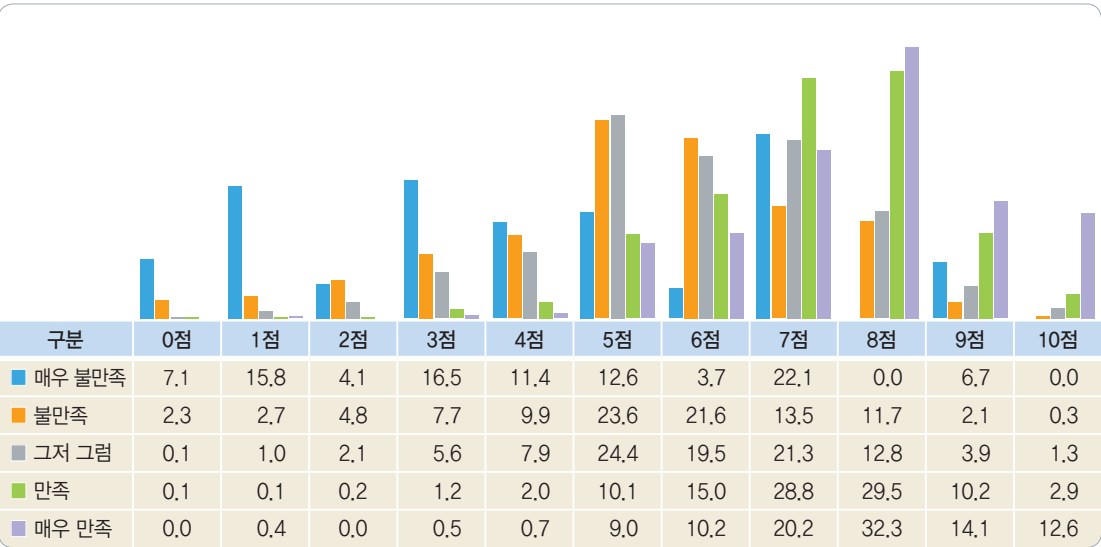
주: 삶의 평가 점수임.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한국복지패널」 제116차를 토대로 저자 분석 및 재구성.

[그림 6]은 사회적 관계 만족 수준에 따른 행복 점수의 분포를 나타낸다. [표 1]에서 사회적 관계에 만족할수록 행복 수준이 높은 것을 확인한 바 있다. [그림 6]에서도 현재의 사회적 관계에 불만족하거나, 특히 매우 불만족하는 경우 낮은 행복 점수에 응답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관계에 매우 불만족하는 경우, 행복 점수를 가장 낮은 0점으로 응답하는 비율이 7.1%에 이른다. 1점의 응답률은 15.8%이고, 0~1점이라는 가장 낮은 점수 범위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현재의 사회적 관계에 만족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행복 점수를 골랐고, 타인과의 관계가 부족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은 행복 취약계층이 된다.

[그림 6] 사회적 관계 만족과 행복 점수 분포(2020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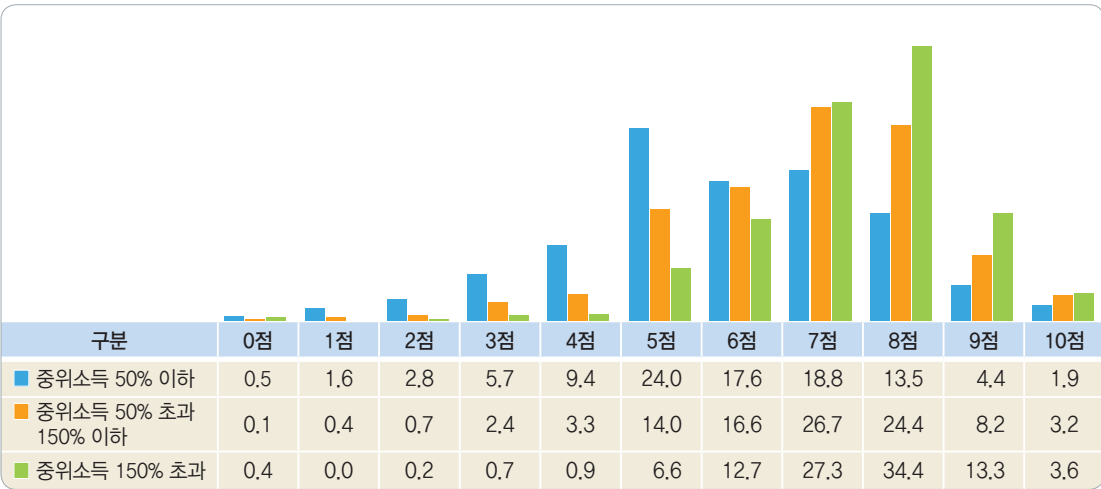
주: 삶의 평가 점수임.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한국복지패널」 제116차를 토대로 저자 분석 및 재구성.

[그림 7]은 물질적 기반인 가구 경제상황에 따른 행복 점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저소득 가구로 볼 수 있다. 중위소득의 150%를 초과하면 고소득 가구로 볼 수 있고,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면서 150% 이하이면 중간계층으로 볼 수 있다. 저소득 가구에서 0~5점 범위의 낮은 행복 점수에 응답한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다. 고소득 집단은 4점까지의 낮은 행복 점수에 응답한 경우가 거의 없는 반면, 5점부터 응답률이 나타나기 시작해 행복 점수가 8점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중산층은 7점을 중심

으로 행복 점수 응답률이 분포되어 있다. 경제적 취약계층은 행복 측면에서도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7] 가구 경제상황에 따른 행복 점수 분포(2020년)

(단위: %)



주: 삶의 평가 점수임.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한국복지패널」 제116차를 토대로 저자 분석 및 재구성.

IV. 무엇을 해야 할까?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복지국가”

행복한 삶은 누구나 바라는 당연한 삶의 모습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경제 발전 수준이 세계 10위권에 이르렀고,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랐는데도 삶에 대한 평가를 물어보는 질문에 여전히 낮은 행복 점수로 응답하는 행복 취약계층이 있다. 앞서 행복의 불평등한 분포가 한국인의 행복 수준을 저해하는 요소임을 확인한 바 있다([그림 2] 참조). 행복 취약계층이 누구인지 찾고 삶의 여건을 개선하여 그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 그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면서도 행복 불평등을 개선하는 것 등이 한국인의 행복을 증진하는 주요한 방법이다.

[그림 8]에서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사회지출 규모로 측정하는 복지국가 수준과 행복 수준을 비교한 결과를 보여 준다. 복지국가 수준이 높을수록 국민들이 누리는 전반적인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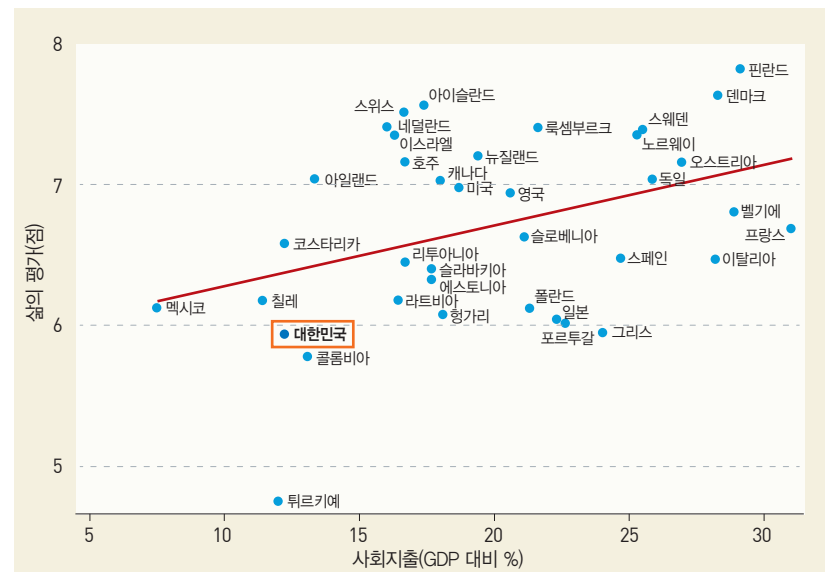


수준이 높다. 그런데 행복 수준이 낮은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 복지국가 수준, 즉 사회 지출 규모가 낮은 편이다. 한국인의 행복을 증진하려면 국가가 행복 취약계층에 적극적인 복지 국가의 역할을 해야 한다.

복지국가를 실현하려면 몇 가지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행복 취약계층이 누구인지에 대한 통계 구축도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성별이나 생애 주기, 교육 수준과 종사상 지위, 소득과 사회적 관계 등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정형화된 사회경제적 요인과 그 결과로 나타난 행복 취약계층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는 행복의 관점에서 일회적인 스냅샷을 확인한 것에 그칠뿐더러 다양한 삶의 여건을 탐색하지도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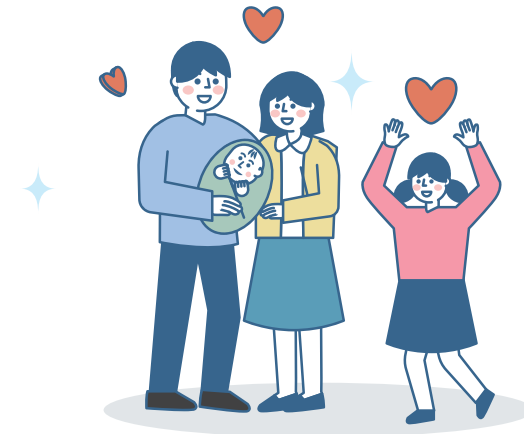
향후에는 거주 지역이나 동네, 주거 등의 정주 여건과 종사상 지위로 보는 안정성, 일자리의 양과 질, 소득에 따른 지출 수준이나 부채부담, 사회적 관계의 양상 등 구체적인 삶의 면면에 따른 행복 취약계층을 찾아내고, 시간에 따른 변화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기에서는 한국복지패널을 원자료로 활용하였으므로, 조사 결과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결과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국가 통계 생산과 관리를 통해 한국인의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림 8] 복지국가와 행복



자료: 김성아(2022b).

한국인의 행복,
무엇을 해야 할까?



참고문헌

- 김성아(2022a), 「국제비교로 보는 한국인의 행복」, ISSUE & FOCU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성아(2022b),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국가 단위 행복지표 현황과 정책 과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창립 4주년 기념 심포지엄 발표자료.
- 외교부 보도참고자료(2021. 7. 4), 「대한민국,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선진국 그룹 진출」, 외교부.
- 이태진, 김성아 외(2021),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2020), 「한국복지패널」 제12~16차.
- IMF World Economic Outlook(2022. 10), "GDP, Current Prices",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D@WEO/OEMDC/ADVEC/WEOWORLD>(검색일: 2022. 10. 15).
- OECD(2022a), "Housing Conditions, Percentage of Households Living without Indoor Flushing Toilet", <https://www.oecd.org/housing/data/affordable-housing-database/housing-conditions.htm>(검색일: 2022. 10. 15).
- OECD(2022b), "Life Expectancy at Birth (indicator)", doi: 10.1787/27e0fc9d-en(검색일: 2022.10.15).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복",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검색일: 2022. 10. 15).

지난 25년, 우리가 사는 집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 *

현대환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 주무관
daebooroo@korea.kr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교육학 박사
choiey6012@gmail.com

2020년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인구, 가구, 주택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첫해이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진행되던 우리나라 인구·가구 구조 및 주택시장의 변화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더욱 가속화되었다. 인구·가구 구조 변화는 소득, 주택 가격과 함께 주택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미래 전망이 중요하지만 예측하기가 한층 더 어려워지고 있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신뢰성이 높은 자료에 기반한 장기 시계열 분석으로 변화의 방향성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의 전수 및 표본 자료에 기반한 장기 시계열 분석으로 지난 25년(1995~2020년) 동안 우리가 사는 집의 변화를 살펴 보았다. 먼저 주택보급률과 점유형태를 확인하였고, 이어 주요 주거복지 정책 대상인 아동가구, 청년가구, 노인가구의 주거빈곤 실태를 살펴 보았다. 아울러 주거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친족가구의 주거빈곤 실태도 살펴보았다.



* 이 글은 통계개발원(2022)에서 수행한 「인구·가구 구조와 주거 특성 변화(1985~2020년)」 연구의 일부를 발췌·재구성한 것임.

I. 인구 성장의 둔화와 가구·주택의 증가 ●●●●●

“2020년에는 주택보다 가구가 더 많이 증가하였다”

인구 성장과 도시 집중으로 도시의 주택 부족 문제를 겪어 온 수십 년 동안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진단이 이어졌다. 하지만 지난 25년(1995~2020년) 동안 인구, 가구, 주택의 규모 변화를 보면 주택(93.6%), 가구(61.5%), 인구(16.2%)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최근 5년(2015~2020년) 동안에도 주택(13.2%), 가구(9.5%), 인구(1.5%) 순으로 증가율이 높아 순서의 변화가 없었다. 인구가 상대적으로 정체된 가운데 가구와 주택의 증가율이 여전히 높다. 주택 증가율은 수도권 1기 신도시가 건설된 1990~1995년 동안 30.1%로 가장 높았고, 2015~2020년 동안 13.2%의 증가율을 보였다(표 1).

[표 1] 인구·가구·주택수와 증가율(1995~2020년)

(단위: 천 명, 천 가구, 천 호, %)

	구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1995~2020년 증감
인구	총인구	44,609	46,136	47,279	48,580	51,069	51,829	7,220
	증가율	2.8	3.4	2.5	2.8	5.1	1.5	16.2
가구	일반가구수	12,958	14,312	15,887	17,339	19,112	20,927	7,969
	증가율	14.1	10.4	11.0	9.1	10.2	9.5	61.5
주택	주택수	9,570	11,472	13,223	14,677	16,367	18,526	8,956
	증가율	30.1	19.9	15.3	11.0	11.5	13.2	93.6

주 : 주택 수에는 빈집을 포함함.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자료(1995~201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2015~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주택 수요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2020년에는 추세에서 크게 벗어날 정도로 가구수가 급증해 2019~2020년 동안 주택(40만 호)보다 가구(58만 가구)가 더 많이 증가하였다(표 2). 2020~2021년 동안에도 주택(29만 호)보다 가구(52만 가구)가 더 많이 증가하였는데, 인구(-9만 명)는 역사상 처음으로 절대 감소를 기록하였다.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최근의 가구 증가세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표 2] 인구 · 가구 · 주택수와 증가율(2015~2021년)

(단위: 천 명, 천 가구, 천 호,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인구	총인구	51,069	51,270	51,423	51,630	51,779	51,829
	증가율	-	0.4	0.3	0.4	0.3	0.1
가구	일반가구수	19,111	19,368	19,674	19,979	20,343	20,927
	증가율	-	1.3	1.6	1.6	1.8	2.9
주택	주택수	16,367	16,692	17,123	17,633	18,127	18,812
	증가율	-	2.0	2.6	3.0	2.8	2.2

주: 주택 수에는 빈집을 포함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2015~2021년).

주택보급률은 재고 주택수가 가구수에 비해 얼마나 부족한지 또는 여유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양적 지표로 가구수에 대한 주택수의 백분율을 의미하는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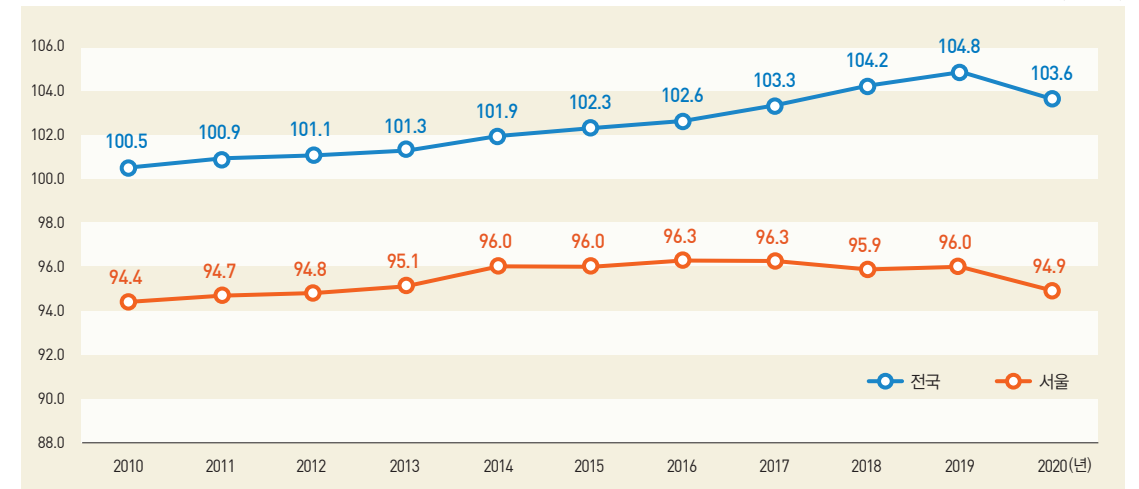
$$\text{주택보급률} = \frac{\text{주택수}}{\text{가구수}} \times 100$$

주택보급률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의한 주택수와 일반가구수를 기반으로 한다.¹⁾ 인구와 가구의 증가 속도에 비해 주택 공급이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이 이어지면서 주택보급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2020년에 예외적으로 주택수보다 가구수가 더 많이 증가하면서 2019~2020년 동안 주택보급률이 전국은 104.8%에서 103.6%로 감소하고 서울은 96.0%에서 94.9%로 감소하였다(그림 1).

1)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다가구주택은 소유주가 1명이기 때문에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1채의 주택으로 산정되는데, 주택 보급률에서는 다가구 구분거처를 반영해 여러 채의 주택으로 산정됨.

[그림 1] 전국 · 서울의 주택보급률 변화(2010~2020년)

(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 (新)주택보급률, KOSIS.

II. 2015~2020년: 점유형태에 거의 변화가 없는 시기

“2015~2020년 동안 전세의 월세화 경향이 멈췄다”

지난 25년간 자가 점유율은 55% 전후에서 거의 변화가 없었다.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증가하다 2010년에 54.2%로 감소하였으나 2015년에 56.8%로 다시 증가하였고 2020년에도 57.3%로 소폭 증가하였다(표 3).

전세 거주 비율은 1995년 29.7%에서 2015년 15.5%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20년에는 15.5%로 변화가 없었다. 반면 월세 거주 비율은 1995년 14.5%에서 2015년 23.7%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20년에는 23.4%로 소폭 감소해 최근 5년 동안에는 전세의 월세화 경향이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²⁾

2) 이 글에서는 월세와 사글세를 월세로 통칭하였는데, 월세는 매월 집세를 내는 경우이며, 사글세는 몇 개월 치 집세를 미리 지급한 후 매월 공제하는 경우를 말함.

[표 3] 가구의 점유형태 변화(1995~2020년)

(단위: 천 가구, %)

구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자가	6,910	53.3	7,753	54.2	8,828	55.6	9,390	54.2	10,850	56.8	11,989	57.3
전세	3,845	29.7	4,040	28.2	3,557	22.4	3,766	21.7	2,961	15.5	3,252	15.5
월세	1,875	14.5	2,113	14.8	3,012	19.0	3,720	21.5	4,529	23.7	4,905	23.4
무상	328	2.5	406	2.8	490	3.1	464	2.7	773	4.0	781	3.7
전체	12,958	100.0	14,312	100.0	15,887	100.0	17,339	100.0	19,112	100.0	20,927	100.0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자료(1995~201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2015~2020년).

“최근 5년간 무주택 가구 비율은 거의 변화가 없고, 다주택 가구 비율은 증가하였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처의 점유 형태와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은 타지 주택 보유 여부를 함께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 자가에 거주하면서 타지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구(1주택 가구) 비율은 2005년 49.0%, 2010년 45.8%, 2015년 48.5%, 2020년 46.8%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였다. 자가에 거주하면서 타지에 별도의 주택을 보유한 가구(다주택 가구) 비율은 2015년 8.3%에서 2020년 10.5%로 증가하였고,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면서 타지에 주택을 보유한 가구³⁾ 비율은 2015년 5.4%에서 2020년 4.8%로 감소하였다.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면서

[표 4] 가구의 거처 점유 및 타지 주택 보유 형태(2005~2020년)

(단위: 천 가구, %)

구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자가거주 타지보유(다주택)	1,047	6.6	1,443	8.3	1,585	8.3	2,201	10.5
자가거주 타지미보유(1주택)	7,781	49.0	7,946	45.8	9,265	48.5	9,788	46.8
임차거주 타지보유	747	4.7	1,239	7.1	1,037	5.4	1,008	4.8
임차거주 타지미보유(무주택)	6,312	39.7	6,711	38.7	7,225	37.8	7,929	37.9
전체	15,887	100.0	17,339	100.0	19,112	100.0	20,927	100.0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자료(2005~201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2015~2020년).

3) 임차해서 거주하면서 타지 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타지 주택의 수에 따라 1주택 가구나 다주택 가구로 분류될 수 있으나, 인구주택 총조사에서는 보유 주택수를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 가구를 별도의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함.

타지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구(무주택 가구) 비율은 2015년 37.8%에서 2020년 37.9%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자가 거주 가구와 타지 주택 보유 가구를 포함하는 주택보유율도 2015년 62.2%에서 2020년 62.1%로 거의 차이가 없다.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의 자가 점유율이 낮다”

뉴욕, 런던, 도쿄 등 주요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서울은 세입자 비율이 높은 세입자의 도시이다.⁴⁾ 2020년 서울의 자가 점유율은 43.5%로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낮는데, 이는 전국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을 뿐 아니라 서울 다음으로 자가 점유율이 낮은 대전(51.7%)보다도 8.2%p 낮은 수치이다(표 5, 그림 2).

[표 5] 시도별 자가 점유율(2020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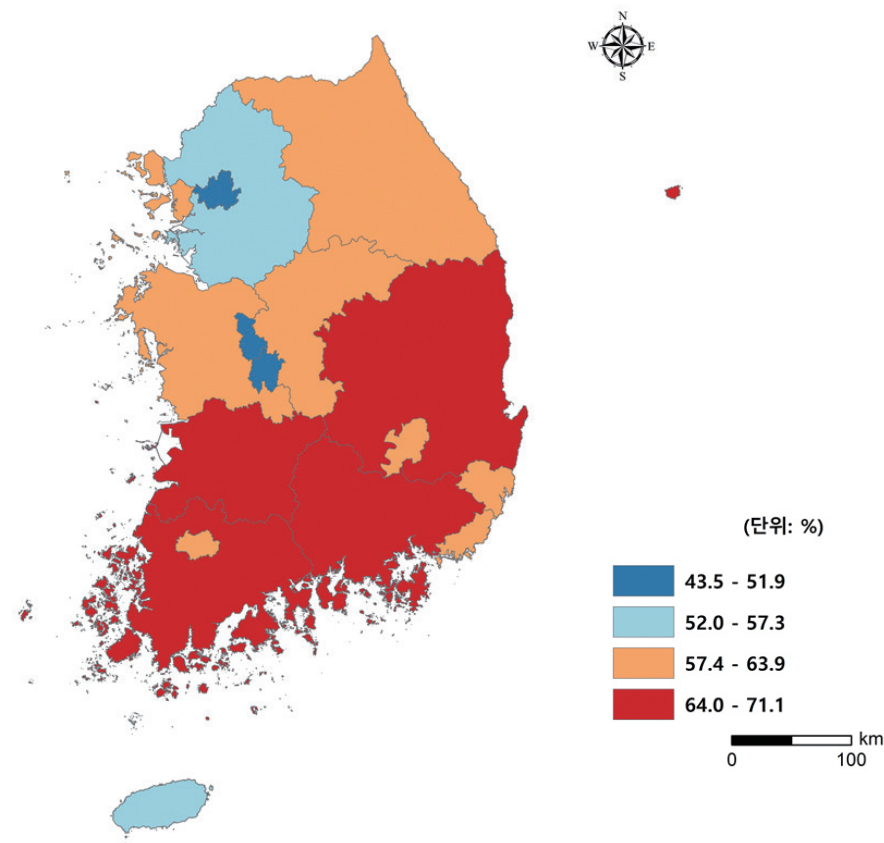
구분	자가 점유율
서울특별시	43.5
부산광역시	59.7
대구광역시	58.4
인천광역시	60.9
광주광역시	61.1
대전광역시	51.7
울산광역시	63.9
세종특별자치시	51.9
경기도	55.3
강원도	61.8
충청북도	62.2
충청남도	63.8
전라북도	67.7
전라남도	71.1
경상북도	69.0
경상남도	66.4
제주특별자치도	56.6
전국	57.3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2020년).

4) 대도시 자가 점유율(homeownership rate)은 2020년 뉴욕이 32.8%(<https://datausa.io/profile/geo/new-york-ny/#housing>), 2019년 런던이 50.5%(Housing in London 2020, p. 27), 2013년 도쿄가 46.4%(<http://stats-japan.com/t/kiji/11963>)임.



[그림 2] 시도별 자가 점유율(2020년)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2020년).

2020년 시군구별 자가 점유율이 높은 곳은 전남 보성군(87.4%), 경북 의성군(86.9%), 전남 강진군(86.5%) 순이고, 낮은 곳은 서울 관악구(31.7%), 용산구(34.1%), 강남구(36.6%) 순이다(표 6). 전라도와 경상도의 군 지역에서 자가 점유율이 높고, 도시 지역에서는 자가 점유율이 낮는데, 시군구 간 자가 점유율의 차이가 크다.

1995~2020년 동안 서울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자가 점유율이 증가하였는데, 매매 가격이 높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중심으로 자가 점유율이 감소하였다. 1995~2020년 동안 자가 점유율 하락 폭은 강남구(-11.7%p), 서초구(-4.9%p), 송파구(-3.7%p) 순으로 크다(표 7, 그림 3, 그림 4).

[표 6] 전체 가구 중 자가 점유율 상·하위 5개 시군구(1995·2020년)

(단위: %)

구분	1995년	2020년
상위	1 전남 신안군 94.2	전남 보성군 87.4
	2 경남 의령군 89.8	경북 의성군 86.9
	3 전남 여천군 89.8	전남 강진군 86.5
	4 전남 함평군 88.8	경남 합천군 86.5
	5 충북 괴산군 88.7	전남 고흥군 86.4
하위	1 서울 금천구 27.3	서울 관악구 31.7
	2 서울 광진구 30.6	서울 용산구 34.1
	3 서울 중구 31.8	서울 강남구 36.6
	4 서울 성동구 31.8	서울 광진구 36.7
	5 충남 계룡출장소 32.3	서울 중구 39.0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자료(1995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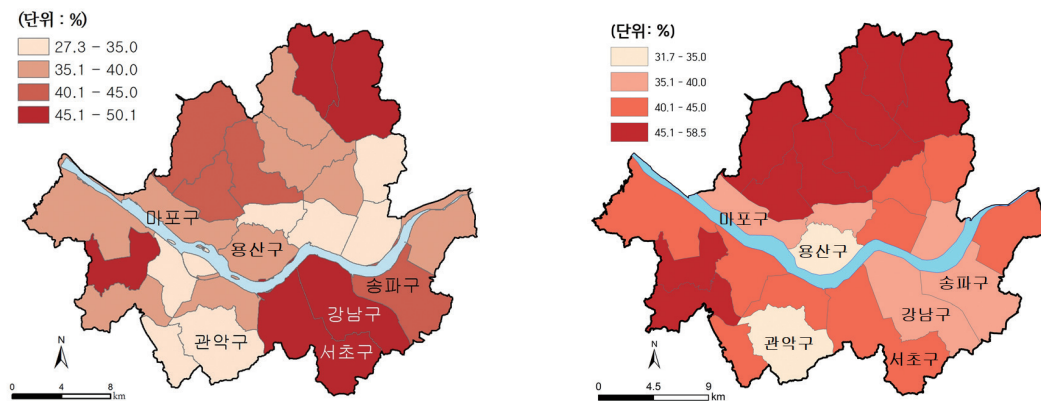
[표 7] 서울시 구별 자가 점유율의 변화(1995~2020년)

(단위: %, %p)

구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1995~2020년 증감
종로구	40.2	40.0	43.7	40.8	40.9	45.0	4.8
중구	31.8	33.9	35.2	35.3	37.5	39.0	7.2
용산구	36.5	37.2	39.5	33.6	34.0	34.1	-2.4
성동구	31.8	36.1	40.3	37.3	38.7	40.1	8.3
광진구	30.6	33.1	37.4	34.1	33.8	36.7	6.1
동대문구	35.9	36.6	40.9	40.2	41.5	42.0	6.1
중랑구	32.6	37.8	42.5	39.8	43.1	44.4	11.8
성북구	39.0	40.3	47.8	45.2	46.1	48.5	9.5
강북구	39.1	42.2	46.6	42.7	44.9	47.6	8.5
도봉구	47.7	54.5	60.5	55.3	58.2	58.5	10.8
노원구	50.1	52.1	56.3	51.5	51.0	51.3	1.2
은평구	44.1	45.7	50.0	46.3	49.2	52.0	7.9
서대문구	42.0	42.9	44.8	42.8	43.0	47.2	5.2
마포구	39.9	38.5	39.9	36.4	36.9	39.7	-0.2
양천구	48.8	47.6	51.9	47.4	49.0	50.1	1.3
강서구	40.0	40.5	47.3	43.0	44.2	41.4	1.4
구로구	37.0	42.6	52.7	48.9	49.3	50.7	13.7
금천구	27.3	31.7	40.5	37.7	41.0	41.6	14.3
영등포구	33.8	38.7	43.9	42.0	41.7	43.4	9.6
동작구	37.6	39.5	44.6	38.9	39.8	42.9	5.3
관악구	35.0	35.5	34.5	30.7	32.3	31.7	-3.3
서초구	49.3	45.6	46.2	43.0	40.5	44.4	-4.9
강남구	48.3	41.1	37.4	34.0	34.1	36.6	-11.7
송파구	43.0	40.8	42.3	39.1	40.5	39.3	-3.7
강동구	37.4	37.9	41.0	38.1	39.5	42.7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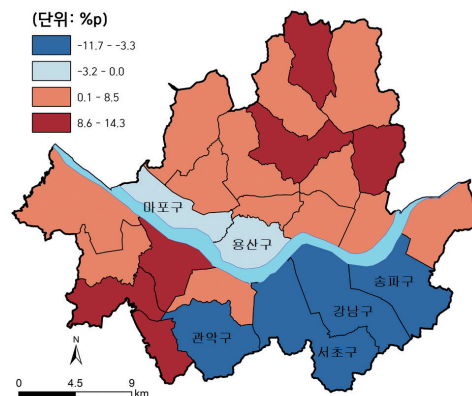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자료(1995~201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2015~2020년).

[그림 3] 서울시 구별 자가 점유율(1995·2020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자료(1995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2020년).

[그림 4] 서울시 구별 자가 점유율의 변화(1995~2020년)



주: 여기에서 변화는 2020년도의 자가 점유율과 1995년의 자가 점유율 차이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자료(1995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2020년).

Ⅲ.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감소와 주택 이외의 거처 증가

“2020년 176만 가구가 주거빈곤 상태이다”

「주거기본법」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최저주거기준은 최소주거면적, 방수, 필수설비,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구조·성능 및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김혜승(2007)⁵⁾의 연구 등에서는 가구원수별 방수와 면적, 시설 기준을 토대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규모를 산정하였다. 이 글에서도 2011년에 개정된 최저주거기준을 기반으로 동일한 산정 기준을 준용하였다(표 8). 이와 함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택 이외의 거처(오피스텔 제외)와 지하·옥상 거주 가구를 포함하는 주거빈곤 가구 규모를 산정하였다. 이 글에서 규정한 주거빈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그림 5).

[표 8] 최저주거기준 산정 기준

법령상 최저주거기준 ¹⁾				인종 자료를 이용한 최저주거기준 ²⁾		시설 (공통)
가구원 수(인)	표준 가구구성	실(방) 구성	총주거면적(㎡)	방수(개)	주거면적(㎡)	
1	1인 가구	1 K	14	1	14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화장실, 전용 목욕시설
2	부부	1 DK	26	1	26	
3	부부+자녀1	2 DK	36	2	36	
4	부부+자녀2	3 DK	43	3	43	
5	부부+자녀3	3 DK	46	3	46	
6	노부모+부부+자녀2	4 DK	55	4	55	

주: 1) 법령상 최저주거기준에서 K는 부엌, DK는 식사실 겸 부엌을 의미하며, 숫자는 침실(거실겸용 포함) 또는 침실로 활용이 가능한 방의 수를 말함.

2) 인종 자료를 이용한 최저주거기준은 7인 이상 가구를 제외한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원수별 방수, 주거면적, 시설 기준 중 하나라도 미달이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로 산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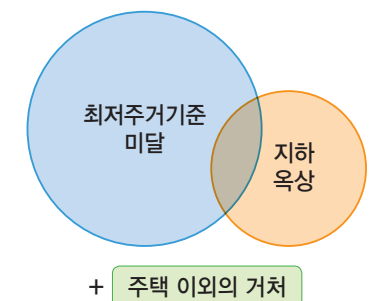
- 가구당 주거면적 = (가구사용 총 방수/주택 총 방수) × 주택연면적

- 가구사용 총 방수 = 가구침실수 + 가구침실외 방수 + 가구거실수 + 가구식당수

- 주택 총 방수 = 주택침실수 + 주택침실 외 방수 + 주택거실수 + 주택식당수

[그림 5] 주거빈곤 가구의 구성

- 「주거기본법」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 지하(반지하)·옥상(옥탑) 거주 가구
-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과 같은 주택 이외의 거처 (오피스텔 제외) 거주 가구



5) 김혜승, 2007, “최저주거기준을 활용한 2006년 주거복지 소요추정 연구”, 국토연구원 보고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수는 1995년 589만(46.3%), 2000년 407만(28.7%), 2005년 254만(16.1%), 2010년 203만(11.8%), 2015년 156만(8.2%), 2020년 97만(4.6%) 가구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표 9). 반면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 가구는 1995년 4만(0.3%), 2000년 6만(0.4%), 2005년 6만(0.4%), 2010년 13만(0.7%), 2015년 39만(2.1%), 2020년 45만(2.1%) 가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 가구는 2010~2015년 동안 26만 가구 증가해 증가 규모가 가장 컸으며, 2015~2020년 동안에도 6만 가구가 증가하였으나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1%로 동일하다.

주거빈곤 가구 규모의 시계열 비교는 지하·옥상에 대한 항목을 조사하기 시작한 2005년부터 가능하다. 주거빈곤 가구 규모는 2005년 305만(19.3%), 2010년 256만(14.8%), 2015년 228만(12.0%), 2020년 176만(8.4%) 가구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5년마다 주거빈곤 가구 감소 규모가 50만 가구를 넘었으나 2010~2015년 동안 감소 폭이 28만 가구로 축소되었다. 2015~2020년 동안에는 주거빈곤 가구 감소 규모가 52만 가구로 다시 증가하였다.

[표 9] 최저주거기준 미달 및 주거빈곤 가구 추이(1995~2020년)

(단위: 천 가구, %, 천 명)

구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최저주거 기준 미달	가구	5,892	4,071	2,536	2,029	1,561
	인구	18,010	11,400	6,646	4,998	3,827
주택이외의 거처	가구	46.3	28.7	16.1	11.8	8.2
	인구	43.2	26.1	14.8	10.8	8.0
주거빈곤	가구	42	63	57	129	391
	인구	0.3	0.4	0.4	0.7	2.1
주거빈곤	가구	5,934	4,134	3,046	2,556	2,277
	인구	46.6	29.2	19.3	14.8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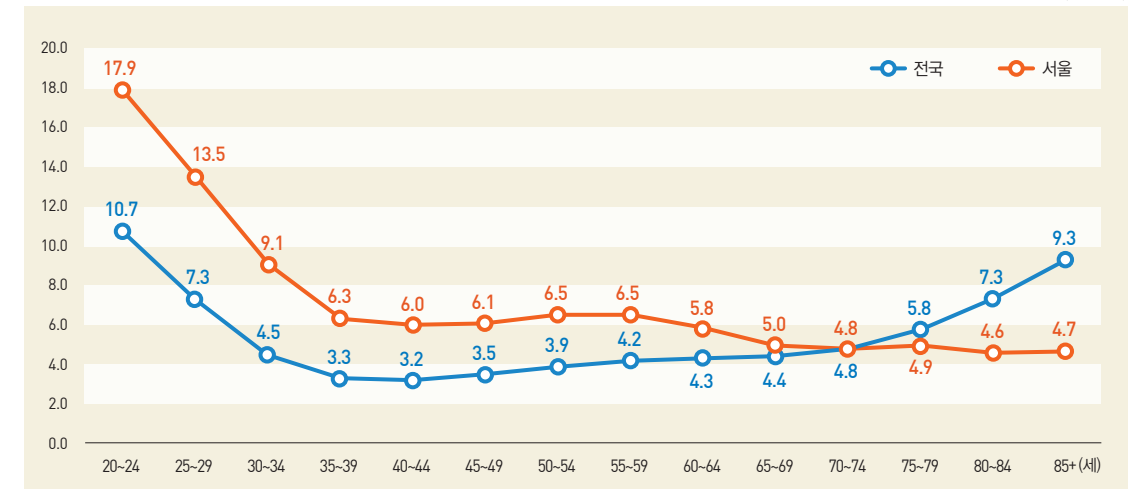
주: 1)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산정시 총 방수는 침실수에 방으로 사용 가능한 거실과 식당방을 더한 방수로 정의함.
2) 6인 이하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집계함.
3) 1995~2000년에는 거주층이 조사되지 않아 주거빈곤가구에 지하(반지하)·옥상(옥탑) 거주 가구가 포함되지 않음.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전수 원자료(1995~201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 원자료(2015~2020년).

2020년 전국과 서울의 가구주 연령대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 6). 연령대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서울과 전국에서 다소 다르게 나타나는데, 전국은 20대와 80대 이상 연령층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이 높은

‘U’자 형태를 보이는 반면, 서울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이 높은 ‘L’자 형태를 보인다.

[그림 6] 전국과 서울의 가구주 연령대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2020년)

(단위: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2020년).

“노인가구의 주거빈곤 해소 속도가 느리다”

주거복지 정책의 주요 대상인 아동, 청년, 노인 가구를 중심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주거빈곤 현황을 살펴보았다. 2020년 주거빈곤 아동가구⁶⁾는 28만 가구(아동 45만 명)인데, 이는 2015년의 57만 가구(아동 94만 명)에 비해 절반 넘게 감소한 것이다(표 10). 2015~2020년 동안 아동 가구의 주거빈곤율 역시 9.4%에서 5.1%로 대폭 감소하였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지하 거주 가구에 비해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 가구는 가구수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다.

2020년 21만 아동가구(아동 35만 명)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며, 지하·옥상에 4만 가구, 주택 이외의 거처에 3만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주거빈곤 아동가구는 서울 9만 가구(아동 13만 명), 경기 6만 가구(아동 10만 명), 인천 2만 가구(아동 3만 명)로 전체 주거빈곤 아동가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6) 아동가구 : 만 19세 이하 가구원이 있는 가구.

[표 10] 전국 아동 및 아동가구의 주거빈곤 현황(2015~2020년)
(단위: 천 명, 천 가구, %)

구분		아동 수				아동가구			
		2015년		2020년		2015년		2020년	
주택	최저주거기준미달	789	8.1	347	4.1	468	7.7	210	3.9
	지하	99	1.0	53	0.6	65	1.1	36	0.7
	옥상	12	0.1	11	0.1	8	0.1	7	0.1
	주택이외의 거처	87	0.9	51	0.6	56	0.9	33	0.6
	주거빈곤	944	9.7	447	5.2	571	9.4	276	5.1
전체		9,778	100.0	8,525	100.0	6,083	100.0	5,403	100.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2015~2020년).

청년가구⁷⁾의 주거빈곤율은 2015~2020년 동안 전국 17.6%에서 11.4%로 감소하였으며, 청년 주거빈곤이 가장 심각한 서울에서도 29.6%에서 21.3%로 크게 감소하였다(표 11, 표 12). 주거빈곤 청년가구 규모는 2015년 45만 가구에서 2020년 35만 가구로 10만 가구 이상 감소하였다. 2020년에는 청년가구 중 20만 가구(6.7%)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며, 지하에 6만 가구, 옥상에 2만 가구, 주택 이외의 거처에 8만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청년 주거빈곤 비율은 전국 11.4%, 서울 21.3%로 전국과 서울이 약 10%p의 큰 차이를 보인다.

주거빈곤 청년가구가 5년 새 감소하긴 하였으나 주거빈곤율의 감소는 청년가구, 특히 1인 청년가구가 증가한 영향이 크다고 판단된다. 2015~2020년 동안 전체 가구가 9.7%(184만 가구) 증가할 때 청년가구는 18.1%(46만 가구) 증가했고, 1인 청년가구는 48.4%(62만 가구) 증가하였다. 1인 청년가구의 주거빈곤율은 2015년 22.6%에서 2020년 13.6%로 급격히 감소하였지만 가구수 기준으로는 29만 가구에서 26만 가구로 3만 가구 감소에 그친다.

2000~2015년 동안 서울 1인 청년가구의 주거빈곤율은 31.2%에서 37.2%로 증가해 전체 가구의 감소 경향과 반대였으나(표 13, 그림 7), 2020년에 23.9%로 13.3%p 감소하였다. 서울 1인 청년가구의 주거빈곤율은 2015~2020년 동안 큰 폭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 가구보다 높다. 서울 1인 청년가구의 주거빈곤율 감소는 전국 1인 청년가구와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주거빈곤 가구 규모 감소보다는 분모인 가구수의 급격한 증가 영향이 더 크다. 서울의

7) 청년가구: 가구주 연령이 20~34세인 가구.

주거빈곤 1인 청년가구는 2015년 15만 가구에서 2020년 13만 가구로 약 2만 가구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2010년(12만 가구)보다 규모가 크다. 2015~2020년 동안 서울 1인 청년가구는 15만 가구 증가하였는데, 이는 서울 전체 가구 증가분인 20만 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치이다.

[표 11] 전국 전체가구와 청년가구의 주거빈곤 규모(2015~2020년)
(단위: 천 가구, %)

구분		2015년						2020년					
		전체 가구		청년가구		1인 청년가구		전체 가구		청년가구		1인 청년가구	
주택	최저주거기준미달	1,561	8.2	290	11.3	161	12.7	970	4.6	204	6.7	138	7.3
	지하	364	1.9	61	2.4	40	3.2	327	1.6	55	1.8	41	2.2
	옥상	54	0.3	13	0.5	11	0.8	66	0.3	17	0.6	14	0.7
	주택이외의 거처	391	2.1	102	4.0	85	6.6	448	2.1	79	2.6	70	3.7
	주거빈곤	2,277	12.0	451	17.6	288	22.6	1,758	8.4	346	11.4	256	13.6
전체		19,050	100.0	2,565	100.0	1,274	100.0	20,894	100.0	3,029	100.0	1,890	100.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2015~2020년).

[표 12] 서울 전체가구와 청년가구의 주거빈곤 규모(2015~2020년)
(단위: 천 가구, %)

구분		2015년						2020년					
		전체 가구		청년가구		1인 청년가구		전체 가구		청년가구		1인 청년가구	
주택	최저주거기준미달	406	10.8	118	17.4	80	20.2	287	7.2	98	12.4	72	13.2
	지하	228	6.0	42	6.2	28	7.1	201	5.0	38	4.8	29	5.4
	옥상	29	0.8	9	1.3	7	1.8	31	0.8	10	1.2	8	1.5
	주택이외의 거처	79	2.1	42	6.3	39	9.8	90	2.3	29	3.7	27	4.9
	주거빈곤	684	18.1	199	29.6	148	37.2	577	14.5	167	21.3	130	23.9
전체		3,775	100.0	675	100.0	397	100.0	3,977	100.0	784	100.0	54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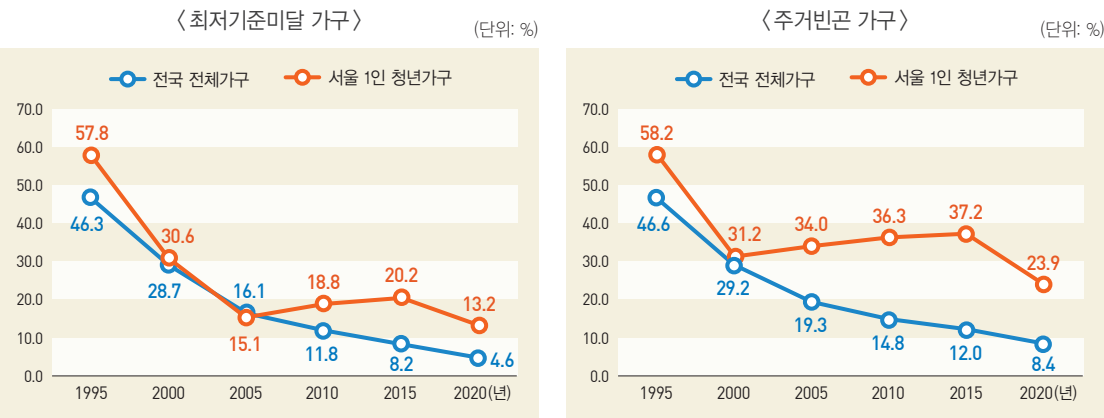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2015~2020년).

[표 13] 전국 전체가구와 서울 1인 청년가구의 주거빈곤 가구 비율 변화(1995~2020년)
(단위: 천 가구, %)

구분	전국 전체가구						서울 1인 청년가구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5,892	4,071	2,536	2,029	1,561	970	121	71	45	64	80	72
주택이외의 기타 거처	46.3	28.7	16.1	11.8	8.2	4.6	57.8	30.6	15.1	18.8	20.2	13.2
주거빈곤	42	63	57	129	391	448	1	1	3	23	39	27
	0.3	0.4	0.4	0.7	2.1	2.1	0.4	0.6	0.9	6.6	9.8	4.9
	5,934	4,134	3,046	2,556	2,277	1,758	122	73	102	124	148	130
	46.6	29.2	19.3	14.8	12.0	8.4	58.2	31.2	34.0	36.3	37.2	23.9

주 : 1995년과 2000년의 주거빈곤에는 지하 옥상 거주 가구가 포함되지 않았음. 당시 해당 항목 조사 미실시.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자료(1995~201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2015~2020년).

[그림 7] 전국 가구와 서울 1인 청년가구의 주거빈곤 가구 비율 변화(1995~2020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자료(1995~201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2015~2020년).

노인가구⁸⁾의 주거빈곤율은 2015~2020년 동안 전국 12.5%에서 9.5%로 감소한 가운데 주거빈곤 노인가구는 51만 가구에서 45만 가구로 감소하였다(표 14). 한편 노인가구의 주거빈곤율은 청년가구와는 달리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낮다(표 15). 2020년 전국 노인가구의 주거빈곤율은 9.5%로 전체 가구(8.4%)보다 높은 반면, 서울 노인가구의 주거빈곤율은 12.4%로 전체 가구(14.5%)보다 낮다. 다만 서울 노인가구의 지하 거주 비율은 5.8%로 전체 가구(5.0%)보다 높다.

[표 14] 전국 전체가구와 노인가구의 주거빈곤 규모(2015~2020년)

(단위: 천 가구, %)

구분		2015년				2020년			
		전체 가구		노인가구		전체 가구		노인가구	
주택	최저주거기준미달	1,561	8.2	387	9.4	970	4.6	264	5.6
	지하	364	1.9	69	1.7	327	1.6	79	1.7
	옥상	54	0.3	7	0.2	66	0.3	8	0.2
주택이외의 거처		391	2.1	65	1.6	448	2.1	104	2.2
주거빈곤		2,277	12.0	514	12.5	1,758	8.4	450	9.5
전체		19,050	100.0	4,101	100.0	20,894	100.0	4,724	100.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2015~2020년).

8) 노인가구 :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

[표 15] 서울 전체가구와 노인가구의 주거빈곤 규모(2015~2020년)

(단위: 천 가구, %)

구분		2015년				2020년			
		전체 가구		노인가구		전체 가구		노인가구	
주택	최저주거기준미달	406	10.8	56	7.5	287	7.2	41	4.9
	지하	228	6.0	44	5.9	201	5.0	49	5.8
	옥상	29	0.8	3	0.5	31	0.8	4	0.5
주택이외의 거처		79	2.1	5	0.7	90	2.3	14	1.7
주거빈곤		684	18.1	100	13.6	577	14.5	104	12.4
전체		3,775	100.0	739	100.0	3,977	100.0	842	100.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2015~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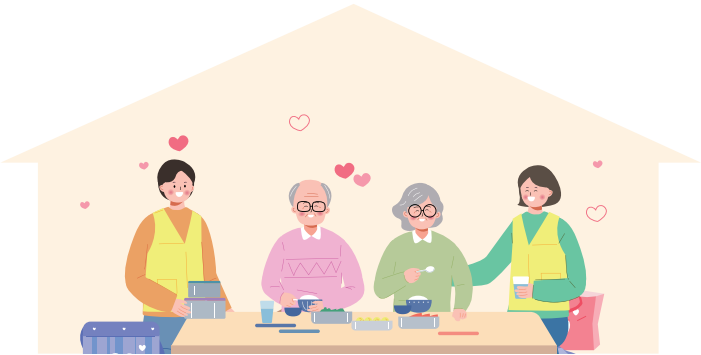
가족이 아닌 남남으로 이루어진 비친족가구는 2020년에 20만 가구이며,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은 10.6%로 친족가구(4.6%)보다 크게 높고,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 비율도 6.3%로 친족가구(2.1%) 대비 3배가량 높다(표 16). 비친족가구의 주거빈곤율은 19.2%(4만 가구)로 친족가구(8.3%)보다 2배 이상 높다.

[표 16] 친족가구와 비친족가구의 주거빈곤 규모(2020년)

(단위: 천 가구, %)

구분		친족가구		비친족가구	
주택	최저주거기준미달	948	4.6	22	10.6
	지하	319	1.5	5	2.4
	옥상	58	0.3	1	0.5
주택이외의 거처		435	2.1	13	6.3
주거빈곤		1,719	8.3	39	19.2
전체		20,690	100.0	204	100.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 원자료(2020년).





IV.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통해 지난 25년간 우리가 사는 집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주택의 절대 부족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자가 점유율은 거의 정체 상태이다. 전세에 비해 월세 거주 가구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전세의 월세화 경향이 20년간 지속되다 최근 5년 동안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2015~2020년 동안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구매하는 갭투자(갭투기)가 성행한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주택 가구 및 타지 주택 보유 비율 증가 역시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은 우리나라가 인구 정점에 도달한 해이다. 절대 인구 감소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가구수가 급증해 주택보급률이 낮아진 것은, 전 세계적인 저금리와 유동성 확대로 주택 가격이 급등한 주택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향후 인구·가구 구조 변화가 주택 수요에 미칠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지난 25년간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나 2010년 이후 주거환경이 열악한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 가구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주거빈곤 가구 규모가 아동가구에서는 크게 감소한 것과 달리 청년 가구와 노인가구에서는 소폭 감소했다. 주거빈곤 아동가구 및 아동 규모의 절대 감소는 혼인과 출산을 통한 아동가구 형성 자체에 주거환경이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청년가구와 노인가구의 주거빈곤 비율 감소는 주거빈곤 규모 감소보다는 가구수가 증가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되어, 청년가구 및 노인가구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친족가구 중심의 주거복지 정책으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인 비친족가구의 주거빈곤 비율이 높은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지난 25년, 우리가 사는 집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





국민 암 예방수칙에 대한 인식 및 실천행태

김병미

국립암센터 암예방사업부 부장
/보건학 박사

kbm5369@ncc.re.kr

오진경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암관리학과 교수 /보건학 박사

jkoh@ncc.re.kr

I. 들어가며

2021년 우리나라 전체 암 사망자는 82,688명으로 전체사망자(317,680명)의 26%로 사망 원인 1위(인구10만명당 161.1명)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22). 특히, 10년 전에 비해 신생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중 암으로 인한 사망이 인구 10만명당 18.2명이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율이 7.2%를 넘어섰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 들어서는 등 향후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암 사망률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이렇게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 질병으로 국가적인 관심이 높고, 일반 대중들은 암을 죽음과 공포의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이런 암도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널리 알리자는 취지로 국립암센터와 보건복지부는 2006년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 등 암을 예방하는 10가지 생활 수칙인 “국민 암 예방수칙”을 공표하였다(그림 1). 암 예방을 위해 금연과 금주, 건강한 식생활 및 운동 실천, 적정 체중 유지, 성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안전한 성생활, B형간염 예방접종 등을 권고하였다. 또한, 직장에서의 발암성 물질 노출 최소화, 암 조기발견을 위한 정기검진의 필요성도 강조한다. 2016년에는 수칙 중 ‘술은 하루 한두 잔 이내로만 마시기’를 ‘암 예방을 위해 하루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로 바꾸었다. 음주에 관해 절주(節酒)에서 금주(禁酒)로 강화한 것이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도 추가됐다.

2007년부터는 국민들이 암 예방수칙에 대해 얼마나 알고 생활에서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 암 예방수칙 인식 및 실천행태 조사”를 2~3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된 “2021년 국민 암 예방수칙 인식 및 실천행태 조사”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지역·성·연령대별 인구비례에 의해 4,000명을 무작위 표본 추출하여 “암 예방수칙에 대한 인식 및 실천행태”, “코로나 유행으로 암 예방 인식 및 실천이 변화된 부분” 등을 조사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암 사망의 30%는 흡연, 30%는 식이 요인, 18%는 만성간염에 기인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밖에 직업, 유전, 음주, 생식 요인 및 호르몬, 방사선, 환경오염 등의 요인도 각각 1~5% 정도 기여한다. WHO는 이런 위험요인의 예방활동 실천을 통해 암 발생의 3분의 1 가량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IARC, 2021). 국립암센터와 보건복지부는 2006년 ‘국민 10대 암 예방 수칙’을 제정하고 2007년부터 국민들이 암 예방수칙에 대해 얼마나 알고 생활에서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 암 예방수칙 인식 및 실천행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에 실시된 ‘2021년 국민 암 예방수칙 인식 및 실천행태 조사’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지역·성·연령대별 인구비례에 의해 4,000명을 무작위 표본 추출하여 ‘암 예방수칙에 대한 인식 및 실천행태’, ‘코로나 유행으로 암 예방 인식 및 실천이 변화된 부분’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암 예방 수칙을 알고 있으나 실천율은 40%가량으로 그 절반 수준에 그쳤다. 게다가 코로나19 대유행이 암 예방 활동 실천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 유행의 장기화라는 환경적 변화에 맞춰 암 예방을 위한 실천 가능한 구체적 방법 제시와 교육·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림 1] 국민 암 예방 수칙

암을 예방하는 10가지 생활 수칙 국민 암예방 수칙

-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
-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
-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을 먹지 않기
-  암예방을 위하여 하루 한두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
-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
-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하기
-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받기
-  성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 하기
-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 보건 수칙 지키기
-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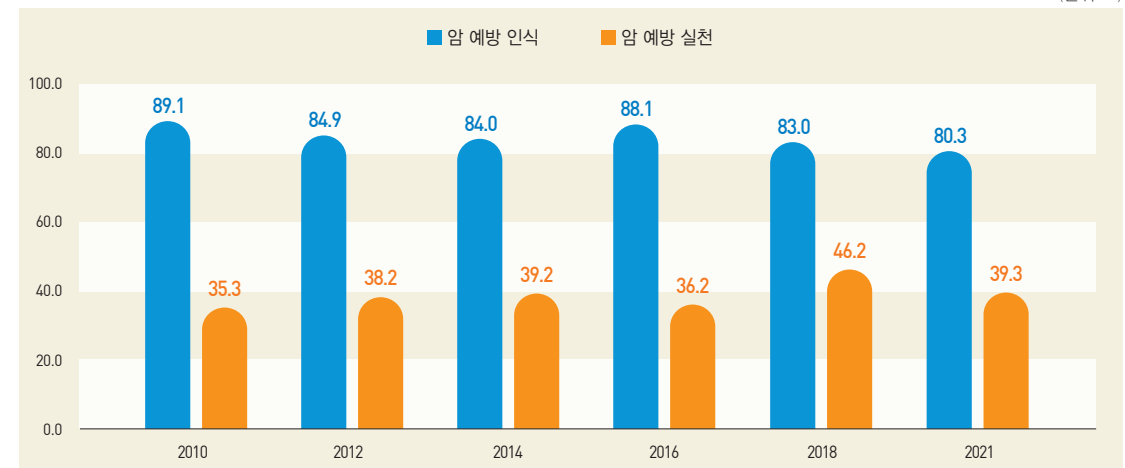
II. 2021년 국민 암 예방 수칙 인식 및 실천행태 조사 결과

“암 예방 수칙, 인지도 높지만 여전히 낮은 실천율”

암 예방 생활수칙 10가지는 금연, 금주, 균형 잡힌 식사, 짜거나 탄 음식 먹지 않기, 운동 하기, 건강 체중 유지하기, 예방접종 받기, 안전한 성생활 하기, 발암 물질 피하기, 조기 건강 검진 받기로 요약된다. 이번 분석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0.3%는 이런 암 예방수칙을 알고 있었으나, 이 수칙을 실천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39.3%에 그쳤다. 암 예방 수칙 인지도는 첫 조사를 벌인 2007년 이후 줄곧 80%대를 유지해왔다. 다만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8년 조사(83%)때 보다는 약간 낮아졌다. 암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실천율은 39.3%로 2018년(46.2%)보다 6.9%p 떨어졌다. 암 예방 실천율은 지난 16년간 최저 31.9%(2008년), 최고 46.2%(2018년)로 50%를 넘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그림 2).

[그림 2] 암 예방 수칙 인식 및 실천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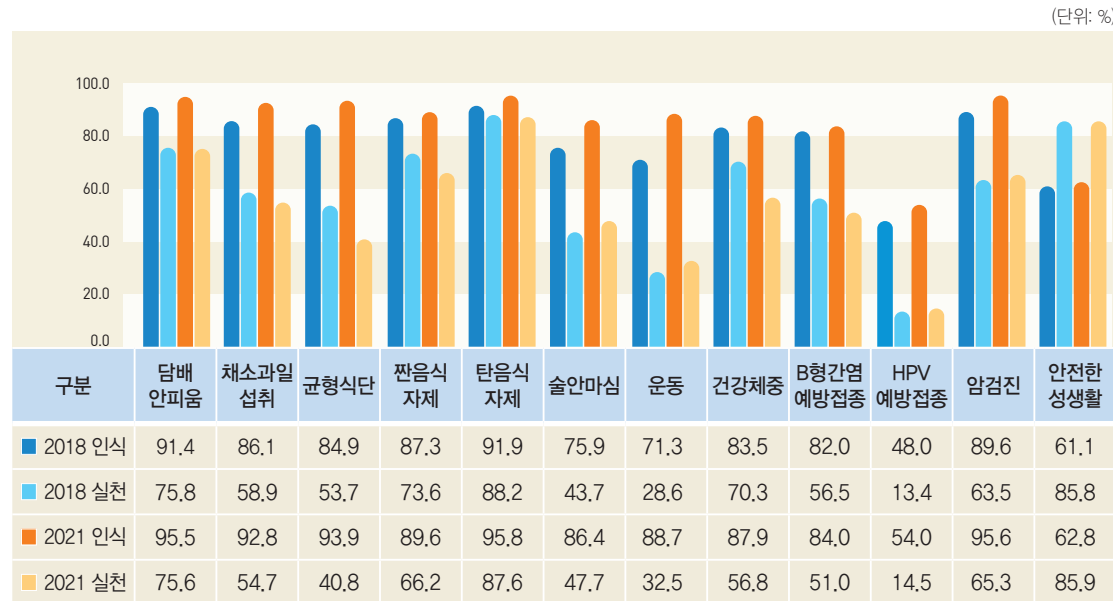
주: 2021년 12월~2022년 2월 성인 4,000명 조사
자료: 국립암센터

“2018년 국민 암 예방수칙 인식 및 실천행태 조사”와 비교한 결과, 각 암 예방수칙별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인식율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그림 3). 하지만 실천율은 ‘술 안 마심’, ‘운동’, ‘HPV 예방접종’, ‘암 검진’, ‘안전한 성생활’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건강 체중 유지’와 ‘균형 잡힌 식생활’의 경우, 실천율이 10% 이상 감소하였다. ‘술 안 마심’은 실천율이 2018년 43.7%에서 2021년 47.7%로 암 예방에 긍정적으로 증가한 반면, 하루 음주량은 3.1잔에서 4.4잔으로 암 예방에 부정적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2021년 국민 암 예방수칙 인식 및 실천행태 조사”에서 암 예방 인식율과 실천율 격차가 30% 이상인 수칙은 ‘채소과일 섭취’, ‘균형식단’, ‘술 안 마심’, ‘운동’, ‘건강 체중’, ‘B형간염 예방접종’, ‘HPV 예방접종’, ‘암 검진’인 것으로 나타나, 격차에 대한 원인 분석과 실천 가능한 방법 제시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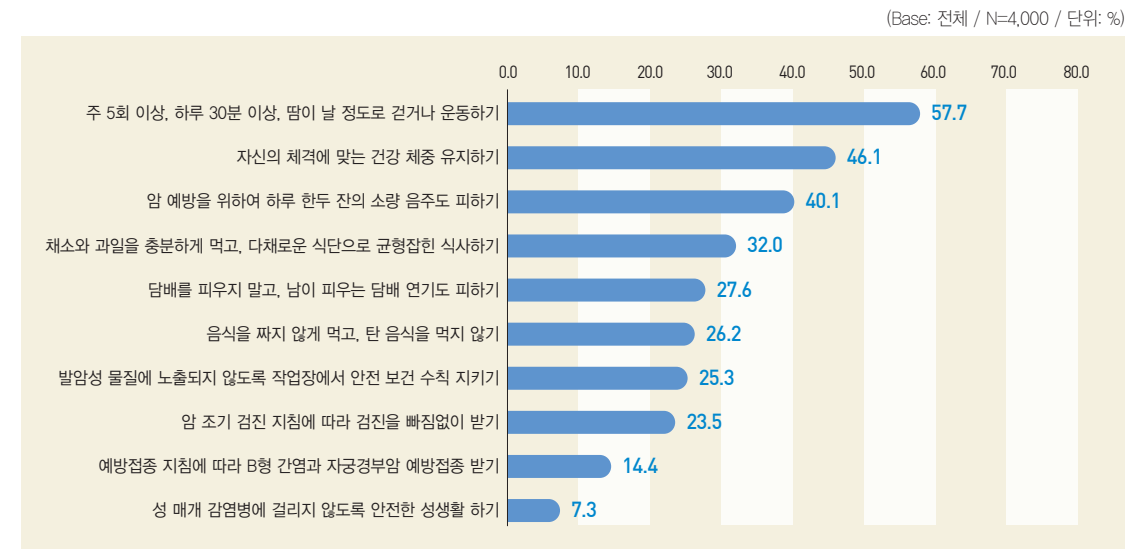
[그림 3] 암 예방수칙별 암예방 인식 및 실천 (2018년과 비교)



“암 예방 수칙 중 가장 실천하기 힘든 건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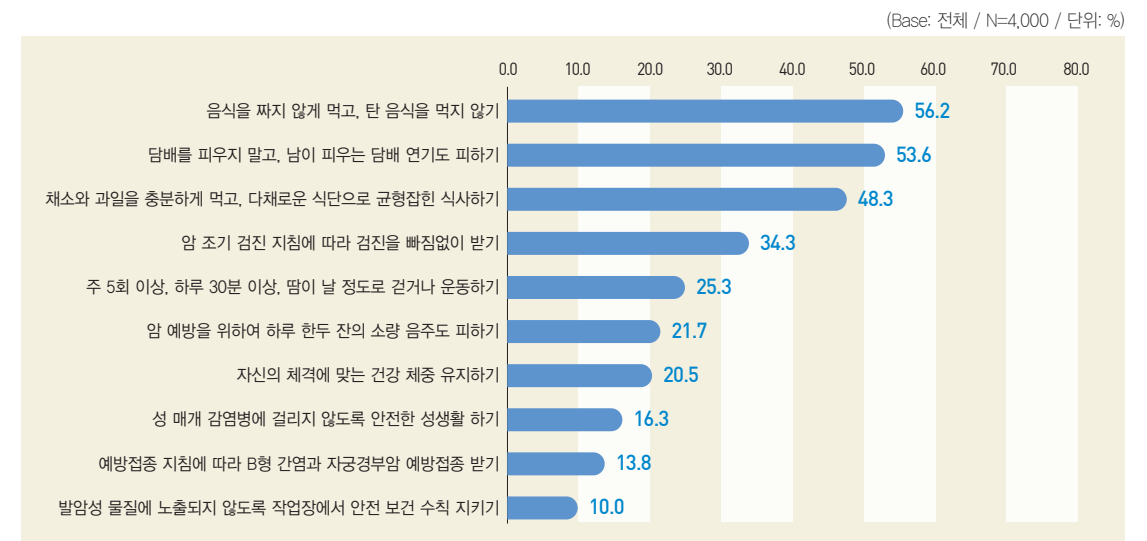
암 예방수칙 중 가장 지키기 어려운 항목으로는 57.7%가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를 선택하였다. 그 이유로는 바쁜 일상(52%)과 운동에 대한 흥미 없음(33%)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운동하기는 인식도(88.7%)와 실천도(32.5%)에서도 10개 항목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하기’와 ‘하루 한 두잔 소량음주도 피하기’가 실천이 어렵다는 응답도 각각 46.1%, 40.1%로 적지 않았다(그림 4).

[그림 4] 암 예방 수칙 중 가장 지키기 어려운 수칙 (1+2+3순위)



반면 가장 지키기 쉬운 암 예방수칙은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 먹지 않기’(56.2%),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53.6%) 등의 순으로 선택하였다(그림 5). 이는 암과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고, 일상생활에서 비교적 쉽게 실천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5] 암 예방 수칙 중 가장 지키기 쉬운 수칙 (1+2+3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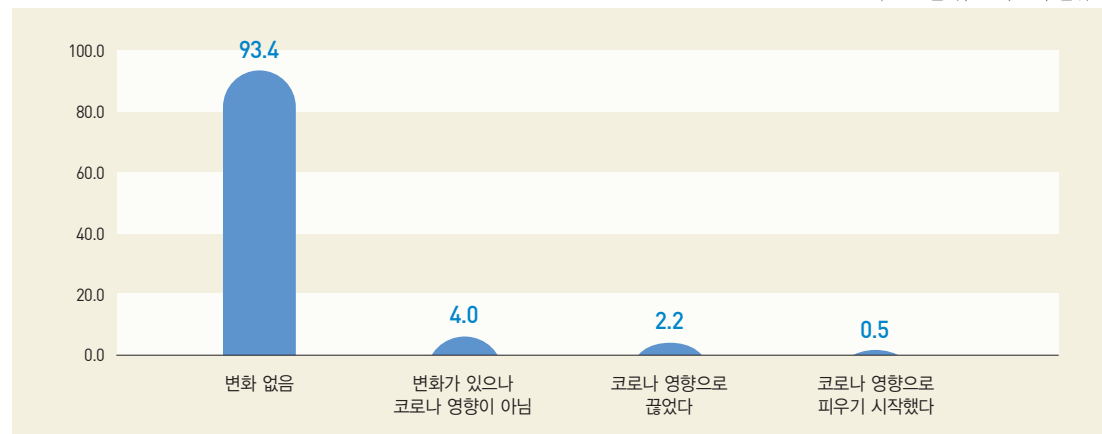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암 예방 실천을 하락”

“코로나 유행으로 암 예방 인식 및 실천이 변화된 부분”에 관해서도 조사하였다. 코로나 유행 이전과 비교하여 코로나 영향으로 흡연 변화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변화없음’이 93.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변화가 있으나 코로나 영향이 아님’ (4.0%), ‘코로나 영향으로 끊었다’ (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6). 코로나 영향으로 음주와 식습관 변화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도 ‘변화 없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18.4%는 음주가 줄었으며, 15.4%는 식습관이 더 건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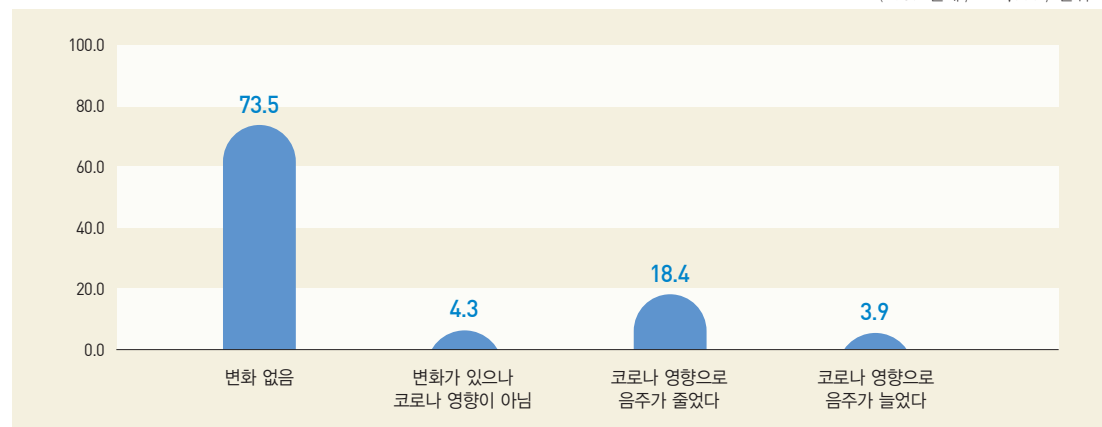
[그림 6] 코로나 영향으로 변화가 있는 것(흡연)

(Base: 전체 / N=4,000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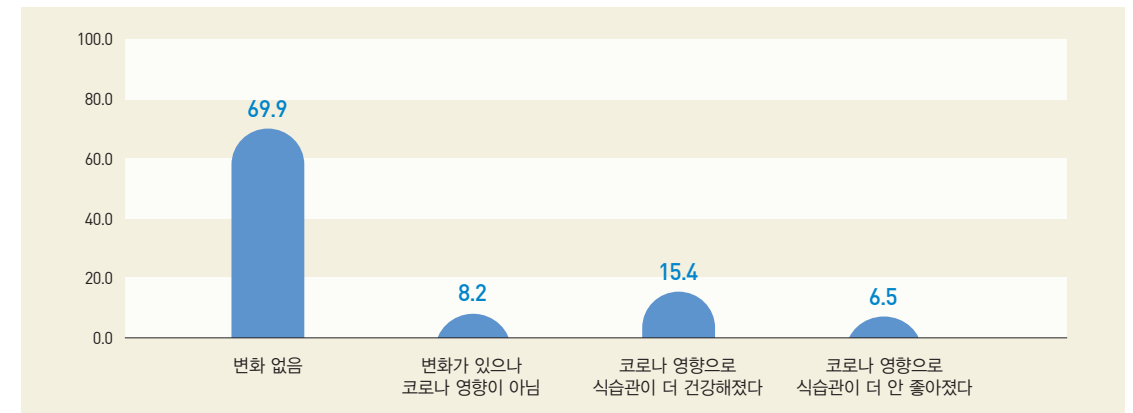
[그림 7] 코로나 영향으로 변화가 있는 것(음주)

(Base: 전체 / N=4,000 / 단위: %)



[그림 8] 코로나 영향으로 변화가 있는 것(식습관)

(Base: 전체 / N=4,000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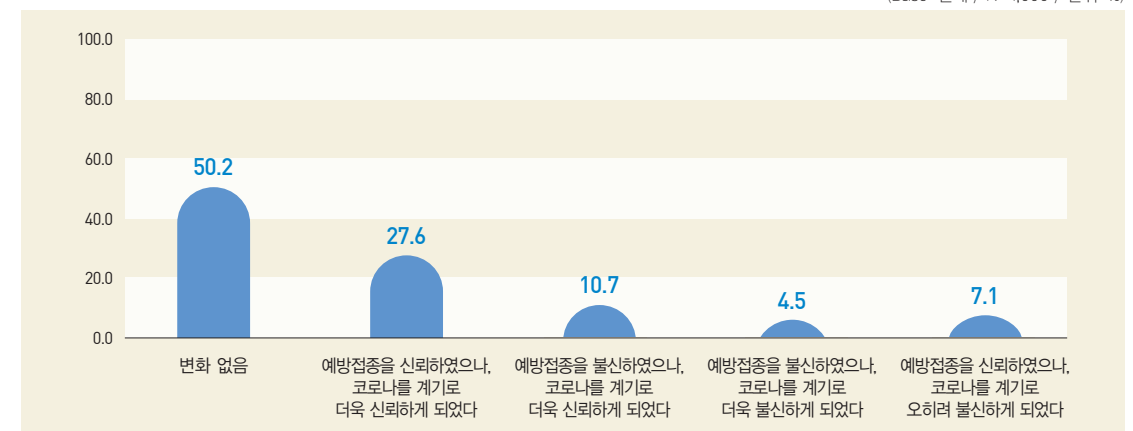


또한, 코로나 유행 이전과 비교하여 코로나 영향으로 예방접종 변화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27.6%가 예방접종을 신뢰하였으나, 코로나 계기로 더욱 신뢰하게 되었으며, 10.7%는 예방접종을 불신하였으나, 코로나를 계기로 오히려 신뢰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9). 코로나 영향으로 암검진 변화에 대한 조사 한 결과에서는 6.3%가 코로나 영향으로 암 검진을 더욱 적극적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0).

하지만, 코로나 영향으로 신체활동 변화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는 32.5%는 코로나 영향으로 운동을 덜 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25.6%는 코로나 영향으로 체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감염병 유행 시기를 대비한 적절한 암 예방 실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그림 11~12).

[그림 9] 코로나 영향으로 변화가 있는 것(예방접종)

(Base: 전체 / N=4,000 / 단위: %)



[그림10] 코로나 영향으로 변화가 있는 것(암 검진)

(Base: 전체 / N=4,000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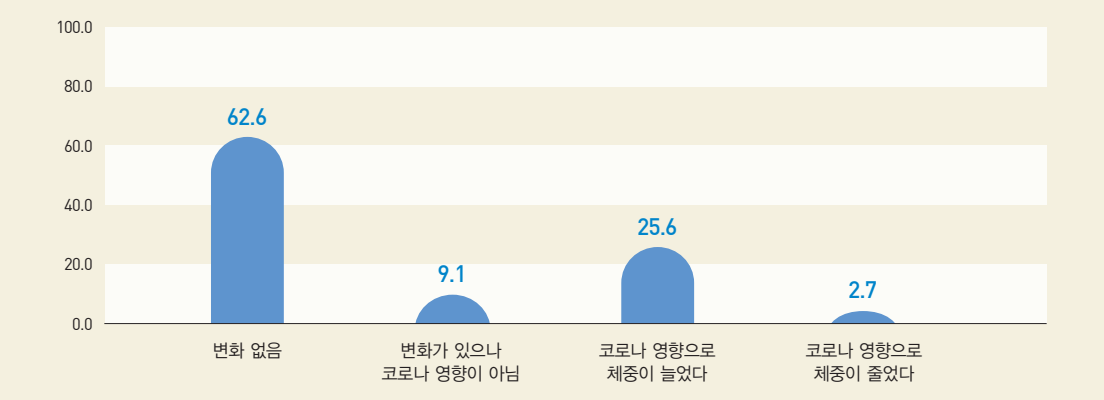
[그림 11] 코로나 영향으로 변화가 있는 것(신체활동)

(Base: 전체 / N=4,000 / 단위: %)



[그림 12] 코로나 영향으로 변화가 있는 것(체중)

(Base: 전체 / N=4,000 / 단위: %)



III. 나가며

지금까지 국민 암 예방 수칙 인식 및 실천 행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국민 대다수가 암이 예방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위한 실천은 부족하다는 게 본 연구의 핵심이다. 또한,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암 예방 실천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 예방 수칙 인지율은 첫 조사를 수행한 2007년 이후부터 2021년까지 80%대를 유지하여 왔지만,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8년 조사 때 보다는 약간 낮아졌다. 또한, 국민 39%는 여전히 암이 예방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암 예방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답해 이들 대상의 인식을 제고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암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실천율은 2018년보다 6.9%p 하락하였으며, 암 예방 실천율은 지난 16년간 최저 31.9%(2008년), 최고 46.2%(2018년)로 50%를 넘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암 예방수칙 중 가장 지키기 어려운 항목으로는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였으며, 그 이유로는 바쁜 일상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이렇게 실천하기 가장 어려운 운동은 코로나19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이후로 사람들은 운동을 덜 하게 되었으며, 체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어떻게 신체활동을 증가시키고 운동을 하게 할지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 비만과 암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일반 대중에게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국민이 암 예방 실천지침자료는 국가암정보센터(<https://www.cancer.go.kr>) 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직접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2022년 흡연, 음주, 체중, 감염, 신체활동 실천지침이 개정 중에 있으며 2023년도에는 다양한 계층의 암 예방 실천지침이 개발 될 예정이다.

참고문헌

통계청(2022), 2021년 사망원인통계.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2021), World Cancer Report.
국립암센터(2021), 2021년 대국민 암 예방 수칙 인식 및 생활 행태 조사 결과보고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리 집 소비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손경국

통계청 소득통계개발과 사무관
kyungkuk@korea.kr

이봉희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 사무관
bong2@korea.kr

2020년부터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우리의 삶은 크게 바뀌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 및 집합금지 등이 시행되면서 외부 활동이 제한되었다. 일상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었고, 배달 등 비대면 소비가 활성화되었으며, 재택근무가 늘어났다.

국민의 소비를 다루는 여러 통계 중에서 일상생활과 가까운 가구 소비의 모습을 가장 빠르고 상세하게 볼 수 있는 국가통계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이다. 가계동향조사는 매월 가구에서 작성한 가계부를 기반으로 가구의 소득·소비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로, 조사 결과가 분기별로 공표되므로 가장 신속하게 제공되는 통계 중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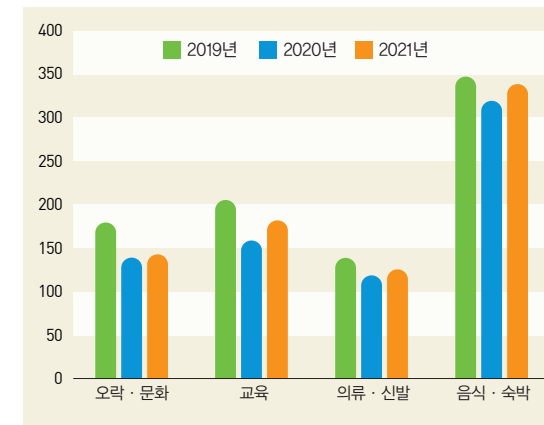
아래에서는 가계동향조사 결과로 본 코로나19 발생 전후의 소비지출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I. 개요 : 2019~2021년 가구 소비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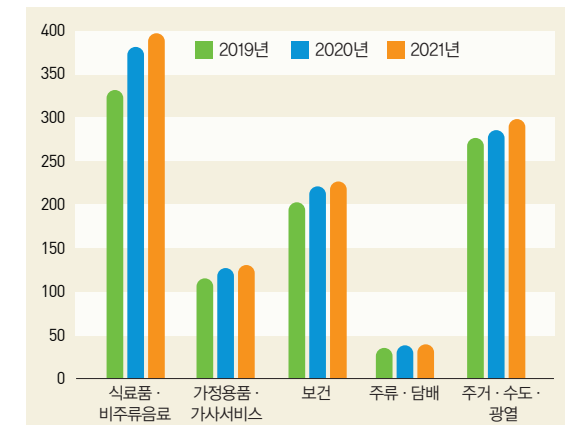
“대면 소비는 대체로 감소하고 비대면 소비는 일부 증가”

- 코로나19가 처음 국내에 발생한 2020년의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40만 원으로 2019년 대비 2.3% 감소하였다.¹⁾
 - 크게 12대 비목별로 보면, 우선 의류·신발,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등 대면 소비 비목에서 주로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등 방역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는 외식, 숙박, 여행, 학원교육 등에서 감소 폭이 컸다.
 - 반면 식료품·비주류음료, 주류·담배, 주거·수도·광열, 가정용품·가사서비스, 보건 등의 비목에서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부분 ‘집’과 관련된 비목이었으며, 건강과 관련된 품목의 지출도 증가하였다.

[그림 1] 2019~2021년 소비지출 주요 감소 비목
(단위: 천 원)



[그림 2] 2019~2021년 소비지출 주요 증가 비목
(단위: 천 원)



주 : 2019년 대비 2020년 지출액의 감소율(증가율)이 큰 순서임.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9~2021년).

1) 분기별로 보면 2020년 1분기·3분기·4분기 소비지출은 전년 동분기보다 감소했으나, 2분기에는 유일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2020년 5월부터 지급되었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감면 정책이 2020년 3~6월 동안 시행되면서 소비가 촉진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된 2021년의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49만 5,000원으로 2020년 대비 3.9% 증가하였다.
- 2020년에 위축되었던 의류·신발,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등의 비목에서 소비가 소폭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019년 소비지출 수준을 밀도는 데 그쳤다.
- 식료품·비주류음료, 주류·담배, 주거·수도·광열, 가정용품·가사서비스, 보건 지출은 2년 연속으로 증가하였고, 반대로 교통은 2년 연속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1] 2019~2021년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단위: 천원, %)

	2019년	2020년		2021년	
	금액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소비지출	2,457	2,400	-2.3%	2,495	3.9%
식료품·비주류음료	333	381	14.6%	397	4.2%
주류·담배	36	38	4.8%	39	4.0%
의류·신발	138	118	-14.5%	126	6.5%
주거·수도·광열	277	286	3.3%	298	4.3%
가정용품·가사서비스	115	127	9.9%	130	2.6%
보건	202	221	9.0%	226	2.7%
교통	296	289	-2.4%	287	-0.7%
통신	123	120	-2.6%	124	3.4%
오락·문화	180	140	-22.6%	143	2.2%
교육	205	159	-22.3%	182	14.1%
음식·숙박	346	319	-7.7%	338	5.8%
기타상품·서비스	206	204	-1.1%	206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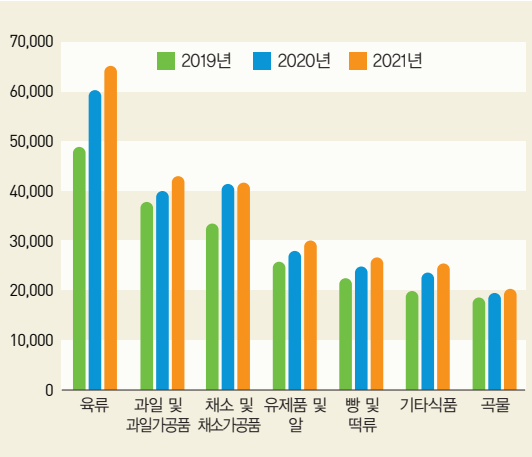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9~2021년)

II. ‘홈코노미’의 시대가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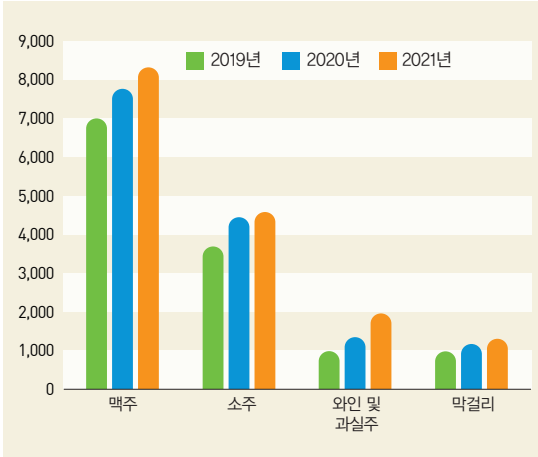
“집에서 긴 시간을 보내는 데 필요한 품목의 소비가 증가”

- 코로나19가 바뀌 놓은 첫 번째 모습은 이른바 ‘홈코노미²⁾’라고 하는 집 안에서의 생활과 관련된 소비가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 가장 많이 증가한 소비 품목은 식료품과 주류이다.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는 2020년에 전년 대비 14.6%, 2021년에는 전년 대비 4.2% 증가하였는데, 주로 육류, 과일, 채소 등의 증가 폭이 컸다. 또한 집에서 간편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밀키트(meal kit) 등이 포함된 기타식품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소주, 맥주, 와인 등의 주류도 2020년 전년 대비 13.7%, 2021년 전년 대비 11.3% 증가하였다.

[그림 3] 2019~2021년 식료품, 비(非)주류음료 소비지출 주요 증가 품목



[그림 4] 2019~2021년 주류 소비지출 주요 증가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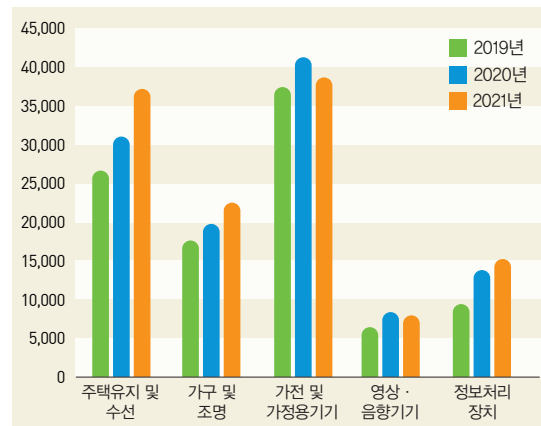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9~2021년).

2) 홈코노미(homeeconomy)는 집을 뜻하는 home과 경제를 뜻하는 economy가 합쳐진 말로, 집이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휴식, 여가, 레저를 즐기는 공간으로 확대되면서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경제 활동을 이르는 신조어이다(네이버 시사상식사전). 재택근무 등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외국에서는 stay-at-home economy 등의 용어로도 쓰인다.

- 거주 공간을 고치고 꾸미는 데 드는 지출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우선 주택 유지 및 수선³⁾ 지출은 2020년에 16.1%, 2021년에 19.8% 증가하였다. 또한 가구 및 조명도 2020년에 12.5%, 2021년에 13.7% 증가하였고, 가전 및 가전용품기는 2020년에 10.5% 증가하였으며, 2021년에는 전년보다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9년보다는 수치가 높았다. 텔레비전 등 영상음향기기와 PC, 노트북 등 정보처리장치도 2020년에 각각 32.2%, 47.4% 증가하였다.
- 외부 활동이 제한되면서 극장, 각종 시설 이용 등의 문화서비스 소비가 대부분 위축되었지만, 실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 소비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콘텐츠 지출은 2020년에 16.3%, 2021년에 9.3%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5] 2019~2021년 홈코노미 관련 소비지출 증가 품목



주: 주택 유지 및 수선은 12대 비목 중 '주거·수도·광열', 가구및조명과 가전및가정용품기는 '가정용품·가사서비스', 영상음향기기와 정보처리장치는 '오락·문화'에 각각 속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9~2021년).

- 한편 외식이 제한되고 대면 소비가 어려워지는 대신 배달·택배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면서 관련 지출이 증가하였다. 음식 등 배달료나 온라인 쇼핑, 비대면 거래 등에 지출되는 택배료 등을 포함하는 일반화물 운송 및 보관 관련 지출이 2020년에 56.9%, 2021년에 63.6%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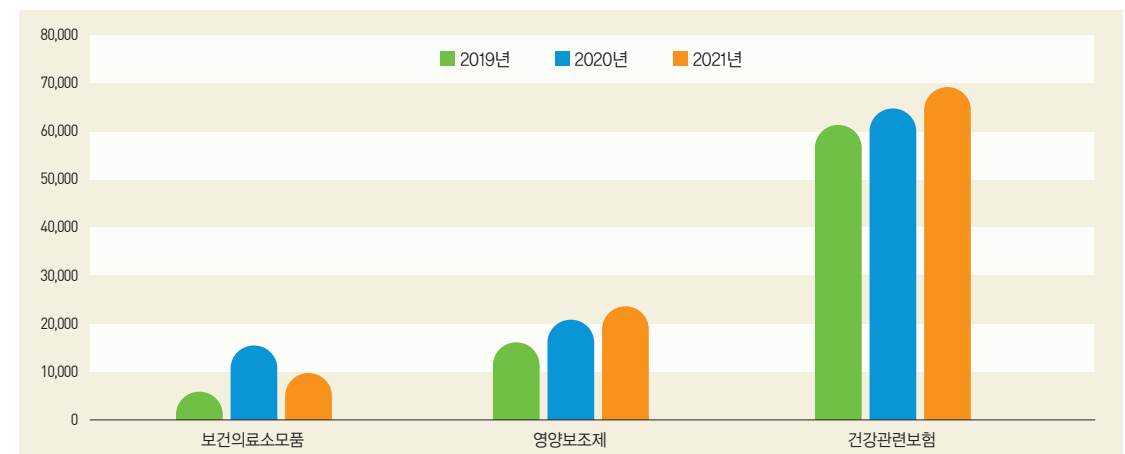
3) 주거의 유지 및 수선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수선재료와 설비·수리서비스를 포함한다.

III. 건강에 대한 관심이 소비로 표출되다

“건강 관련 소비지출도 증가하는 모습”

- 코로나19 전후로 달라진 또 하나의 모습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관련 소비도 늘어났다는 것이다.
 - 우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실내·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에 필요한 소비가 늘어나면서 보건의료소모품 지출이 2020년에 166.5% 증가하였다. 2021년에는 마스크 수급이 안정되면서 2020년 대비 38.4% 감소하였으나, 2019년 지출과 비교하면 1.6배 이상 많았다.
 - 또한 개인 면역력 증진을 위한 영양제 등의 소비가 늘면서 의약품 지출은 2020년에 6.3%, 2021년에 6.9% 증가하였고, 의약품 중 영양보조제는 2020년에 29.8%, 2021년에 13.2% 증가하였다.
 -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 각종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기 마련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 지출도 2020년에 5.4%, 2021년에 3.6% 증가하였다. 특히 실손의료보험 등 건강관련보험 지출이 2020년에 5.7%, 2021년에 6.4% 증가하였다.

[그림 7] 2019~2021년 건강 관련 항목들의 소비지출 추이



주: 보건의료소모품과 영양보조제는 소비지출 12대 비목 중 '보건' 내에서 각각 '의료용소모품'과 '의약품'에 속하고, 건강관련보험은 '기타상품·서비스' 내에서 '보험'에 속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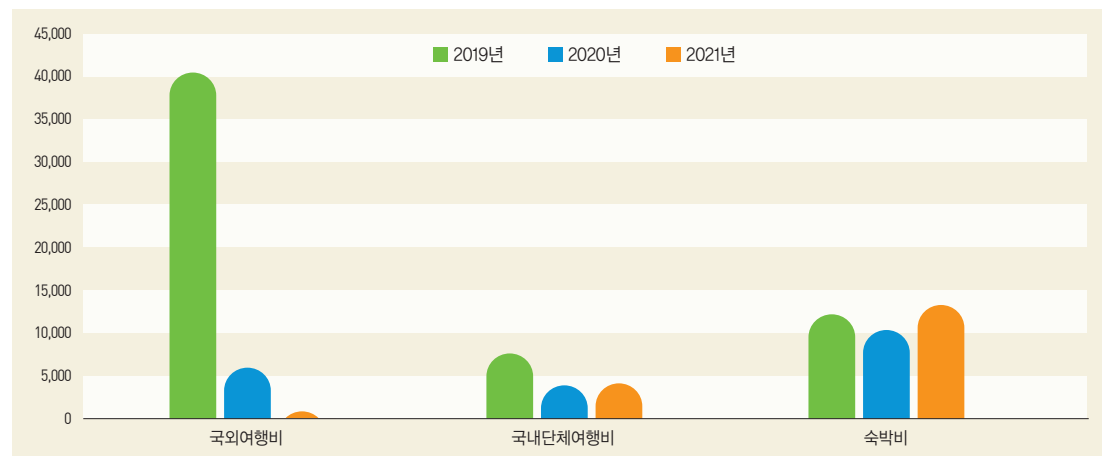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9~2021년).

IV. 위축되었던 여행 소비가 국내여행으로 소폭 회복되다

“국외여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국내여행은 일부를 회복”

-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줄어들었던 소비 품목 중 감소 폭이 가장 컸던 항목은 단체 여행비 중 국외여행비였다.
 - 국외여행비는 2019년에 4만 450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5,913원, 2021년에는 621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각각 85.4%, 89.5% 감소하였다. 2020~2021년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국제항공 편이 급감하고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사실상 국제여행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 보인다.
 - 다만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막 시작된 초기에 국외여행을 다녀온 경우가 있어 일부 금액이 통계에 잡혔지만, 2021년에는 한 해 내내 여행이 제한되어 국외여행비가 전년보다 더 크게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 국내(단체)여행비도 2019년에 7,727원에서 2020년에 3,817원으로 전년 대비 50.6%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2021년에는 4,029원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하였는데, 방역수칙 아래에서도 국내여행 수요의 일부가 회복되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8] 2019~2021년 여행 관련 항목의 소비지출 증감 추이



주: 국외여행비 국내단체여행비는 소비지출 12대 비목 중 '오락·문화' 내에서 '단체여행비', 숙박비는 '음식·숙박'에 각각 속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9~2021년).

- 다만 국내여행의 경우 단체여행 외에 교통, 음식·숙박 등으로 나누어 조사되기도 하는데, 기차 이용을 위한 지출은 2019년에 5,088원에서 2020년에 3,256원으로 36.0%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3,503원으로 7.6% 증가하며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숙박의 경우 2019년에 1만 2,158원에서 2020년에 1만 229원으로 15.9%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1만 3,202원으로 29.1% 증가하며 오히려 2019년 금액을 웃돌았다. 여행지에서 구입한 음식은 외식 등 식사비에 포함되며, 식사비는 2020년에 7.4% 감소하고 2021년에는 5.0% 증가하여 역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V. 최근 추이 : 2022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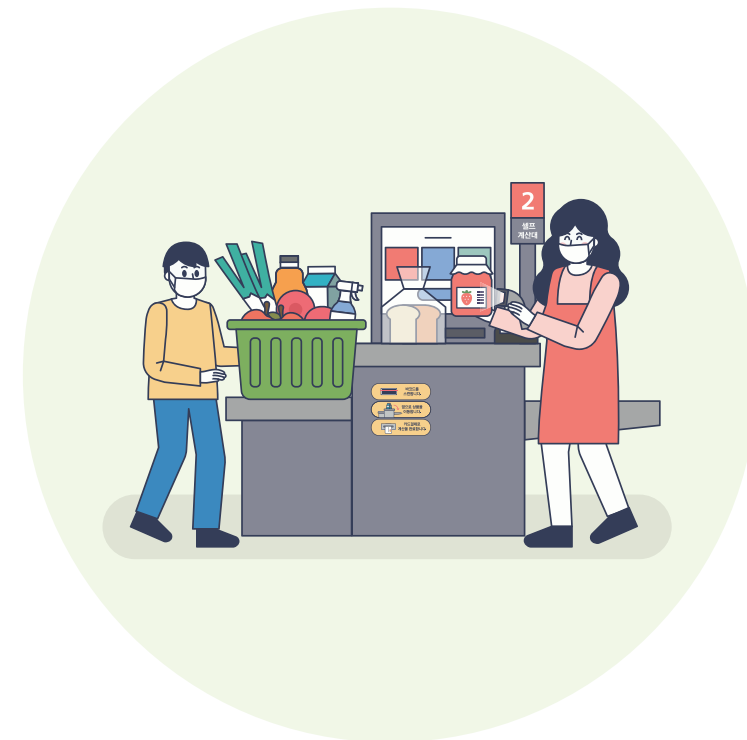
“외식, 숙박 등 대면 소비가 회복되는 한편 물가 상승으로 지출액 증가”

- 2022년 2분기 소비지출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4월 18일)에 따른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와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 분기 대비 5.8% 증가하였다.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4월 18일)로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고, 이로 인해 외부 활동 관련 소비가 다시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 특히 음식숙박이 17.0%, 교통이 11.8%, 오락문화가 19.8% 증가하는 등 기존에 위축되었던 대면 소비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 한편 코로나19 발생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던 거주 공간을 꾸미는 지출이 줄어들면서 가정용품·가사서비스가 9.4%, 주거·수도·광열이 3.3% 감소하였다.
 - 다만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국내 연료비, 외식, 식료품 등의 물가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면서 관련 지출액이 증가한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운송기구 연료비, 식사비 각종 식료품 등은 명목 금액과 실질 금액의 증감률 차이가 컸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리 집 소비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 본 분석은 「가계동향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 가가계동향조사는 시의성 있는 가계경제 진단 등을 위해 매월 전국 7,2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가계부 방식으로 조사하고 있다.
 - 분석에는 2019~2021년 연간 지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현재 가계동향조사 통계 작성 기준인 전국 1인 이상 전체 가구(농림어가 포함)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 가계동향조사는 개인이 아닌 가구(household)를 단위로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 모든 금액은 명목 금액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물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소비자물가지수(2020년=100)를 이용하여 작성된 실질 금액은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중소기업에 미친 영향 : 중소기업 기본통계 심층 분석

오정화

통계청 사무관
(중소벤처기업부 파견 중)
silia24@korea.kr

한창용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책통계분석팀
팀장/경제학 박사
cyhan@kosi.re.kr

이 글에서는 코로나19가 중소기업에 미친 영향을 개별기업 수준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중소기업 기본통계(중소벤처기업부)를 활용하여 2019년에 존재한 기업에 2020년 기업정보를 기업 단위로 연결한 후 2019년에 존재한 기업의 종사자수, 매출액, 기업규모 등이 2020년에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2019년 존재 중소기업의 2020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 감소하였으며, 특히 예술·스포츠·여가, 숙박·음식점, 교육서비스 등 방역조치 대상 산업의 매출액이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전반적인 매출액 감소에도 중소기업 중 33.9%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오히려 증가하였다. 2019년에 존재한 중소기업의 2020년 종사자수는 전년 대비 3.9% 감소하였으며, 숙박·음식점, 예술·스포츠·여가 산업 등에서 매출액, 종사자수 하락에 따른 기업규모 하향이동(예: 중기업, 소기업이 소상공인으로 이동)이 많았다.

I. 분석 개요

“코로나19가 개별기업에 미친 영향 분석 필요”

- 2019년에 코로나19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방역조치를 실시하였으며, 전례 없는 강력한 방역조치로 산업 전반에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손실 보상 등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받은 영향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
- 2020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중소벤처기업부, [표 1])에 따르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매출액은 전년 대비 1.5% 증가하였으며, 특히 방역조치 대상인 숙박·음식점 산업에서 소상공인 매출액이 전년 대비 2.8% 증가하였다.
- 이는 해당 기간 소상공인의 매출액이 증가한 것일 수도 있지만, 소기업·중기업 등 상위 규모 기업의 매출액과 종사자수가 감소하여 소상공인에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
- 이 글에서는 중소기업기본통계를 심층분석하여 코로나19의 영향을 개별기업 단위에서 파악하기 위하여 기업 단위 연계기를 활용하여 2019년과 2020년 중소기업 기본통계를

[표 1] 중소기업 현황 (2019~2020년)

(단위: 개, 명, 억 원, %)

		전 체	중소기업				대기업
			소상공인	소기업 (소상공인 제외)	중기업	소계	
기업 수	'19년	6,898,958	6,445,316	344,611	100,276	6,890,203	8,755
	'20년	7,295,393	6,842,959	338,865	104,199	7,286,023	9,370
	증감률	(5.7)	(6.2)	(-1.7)	(3.9)	(5.7)	(7.0)
종사자	'19년	21,254,650	9,223,529	4,294,995	3,755,385	17,273,909	3,980,741
	'20년	21,580,496	9,461,073	4,286,553	3,793,556	17,541,182	4,039,314
	증감률	(1.5)	(2.6)	(-0.2)	(1.0)	(1.5)	(1.5)
매출액	'19년	56,295,399	9,548,951	5,725,692	11,262,905	26,537,548	29,757,852
	'20년	56,599,655	9,688,748	5,676,472	11,367,800	26,733,019	29,866,636
	증감률	(0.5)	(1.5)	(-0.9)	(0.9)	(0.7)	(0.4)

자료: 2020년 기준 중소기업기본통계(중소벤처기업부)

연결하고 2019년에 존재한 기업(이하 2019년 기준 패널)의 2020년 현황을 살펴보았다. 분석 중 기업규모, 산업 등은 2019년 기준을 따른다.

- ❖ 분석개요: 중소기업 기본통계 내 기업체의 2019년과 2020년 정보 연결, 2019년에 존재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2020년 변화 분석(이하 2019년 존재 기업)
 - 기업규모 : 기업통계등록부(통계청)를 기반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기준 연도 3년 평균매출액과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규모(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를 구분하며, 대기업에는 매출액 기준으로 중소기업 범위초과, 중견기업, 공시대상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 등이 포함됨 (*비영리기업, 외국법인, 산업분류상 공공행정, 가구내고용, 국제 및 외국기관 제외)
 - 매출액과 종사자수 변화로 매년 기업규모 변동가능, 동 분석에서는 기업규모별로 두 개년 매출액을 비교하기 위해 2019년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분석

II. 매출액 변화

“중소기업의 전체 매출액은 1.0% 감소하였으나, 중소기업 중33.9%는 전년보다 매출액 증가”

- 2019년 중소기업의 매출액은 2019년 2,654조 원, 2020년 2,626조 원으로 전년 대비 1.0%가 감소하였다. 반면 2019년 기준 대기업의 2019년 매출액은 2,976조 원, 2020년 매출액은 2,922조 원으로 전년 대비 1.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매출액이 적게 감소하였다.

[표 2] 2019년 존재 기업 매출액 (단위: 개, 억 원, %)

2019년 존재기업		매출액		
구분	기업수	2019년	2020년	전년 대비 증감율
합계	6,898,958	56,295,399	55,478,099	-1.5
중소기업	6,890,203	26,537,548	26,261,098	-1.0
대기업	8,755	29,757,852	29,217,001	-1.8

- 전반적인 매출액 감소에도 중소기업 중 33.9%, 대기업 중 42.9%는 전년보다 매출액이 증가하였다. 한편 2019년에 존재한 중소기업의 11.1%, 대기업의 2.4%는 2020년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개별기업의 매출액 증감 비중 (단위: %)

2019년 존재 기업	전체	증가	동일	감소	폐업	기타 ¹⁾
중소기업	100.0	33.9	5.4	39.2	11.1	10.4
대기업	100.0	42.9	0.4	51.1	2.4	3.1

주: 2019~2020년 모두 매출액이 없거나, 2019~2020년 동일기업으로 연결되지 못한 기업.

“중기업의 매출액은 감소한 반면,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매출액은 증가”

- 기업규모별로 보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19년 소상공인은 매출액이 1.5% 증가하였고, 소기업은 2.2% 증가하였으나, 중기업은 매출액이 4.8% 감소하였다.

[표 4] 기업규모별 매출액 (단위: 개, 억 원, %)

2019년 존재 기업		매출액		
구분	기업수	2019년	2020년	전년 대비 증감
합계	6,890,203	26,537,548	26,261,098	-1.0
소상공인	6,445,316	9,548,951	9,692,207	1.5
소기업	344,611	5,725,692	5,851,080	2.2
중기업	100,276	11,262,905	10,717,810	-4.8

-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증가한 기업 비율은 소기업이 44.3%로 가장 크고, 중기업이 38.5%이며, 소상공인이 33.3%로 가장 작았다. 한편 2019년 기준 소상공인 중 11.5%, 소기업 중 5.1%, 중기업 중 3.8%는 2020년에 존재하지 않았다.

[표 5] 기업규모별 개별기업의 매출액 증감 (구성비) (단위: %)

구분	전체	증가	동일	감소	폐업	기타*
소상공인	100.0	33.3	5.8	38.3	11.5	11.1
소기업	100.0	44.3	0.3	50.1	5.1	0.1
중기업	100.0	38.5	0.1	57.3	3.8	0.3

* 주: 2019~2020년 모두 매출액이 없거나, 2019~2020년 동일기업으로 연결되지 못한 기업.

“예술·스포츠·여가, 숙박·음식점, 교육서비스 등 방역조치 대상 산업의
중소기업 매출액 감소율이 큼”

- 산업별로 중소기업 매출액 변화를 살펴보면, 예술·스포츠·여가, 숙박·음식점, 교육서비스, 광업, 사업시설관리, 개인서비스, 제조업, 운수창고, 보건·사회복지, 도·소매, 건설 등의 산업에서는 전년보다 매출액이 감소하였으며, 수도·하수·폐기물, 농림어업, 전문·과학·기술, 정보통신, 금융보험, 전기·가스·증기, 부동산 등 산업에서는 전년보다 매출액이 증가하였다.
- 코로나19에 따른 방역대책 등으로 산업이 전반적으로 침체되었음에도 중소기업 중 예술·스포츠·여가 산업의 24.8%, 숙박·음식점 산업의 33.9%, 교육서비스 산업의 28.3%에 해당하는 기업의 매출액이 증가하였다. 특히 수도·하수·폐기물 산업 중 절반에 가까운 46.3%의 기업이 전년보다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산업별 중소기업 매출액 (단위: 개, 억 원, %)

2019년 존재기업		매출액		
산업	기업수	'19년	'20년	전년대비증감
예술·스포츠·여가	145,326	178,477	146,144	-18.1
숙박·음식점	816,184	1,311,443	1,119,755	-14.6
교육서비스	223,578	200,343	175,204	-12.5
광업	2,647	27,408	25,231	-7.9
사업시설관리	150,309	604,573	558,587	-7.6
개인서비스	375,707	304,197	283,128	-6.9
제조업	576,574	7,129,693	6,978,012	-2.1
운수창고	614,193	1,054,305	1,033,815	-1.9
보건·사회복지	77,731	682,948	671,326	-1.7
도소매	1,661,902	8,950,739	8,842,894	-1.2
건설업	484,270	3,034,103	2,998,306	-1.2
수도·하수·폐기물	11,294	184,138	186,041	1.0
농림어업	88,446	230,734	243,697	5.6
전문·과학·기술	222,078	792,138	847,183	6.9
정보통신	125,138	634,250	682,195	7.6
금융보험	53,380	248,450	283,365	14.1
전기·가스·증기	94,188	42,735	50,268	17.6
부동산	1,167,258	926,875	1,135,949	22.6
전체	6,890,203	26,537,548	26,261,098	-1.0

[표 7] 산업별 중소기업의 개별기업의 매출액 증감 (구성비) (단위: %)

산업	전체	증가	동일	감소	폐업	기타 ¹⁾
예술·스포츠·여가	100.0	24.8	2.2	48.0	17.3	7.6
부동산	100.0	24.9	17.9	23.9	7.5	25.8
교육서비스	100.0	28.3	2.5	46.1	12.7	10.4
금융·보험	100.0	29.7	2.5	30.1	11.2	26.5
사업시설관리	100.0	33.0	2.7	40.5	13.4	10.3
개인서비스	100.0	33.3	6.3	45.0	10.9	4.5
농림어업	100.0	33.6	1.7	29.1	6.6	29.0
숙박·음식	100.0	33.9	2.1	45.0	17.4	1.6
보건·사회복지	100.0	34.3	1.0	57.8	5.3	1.6
도·소매	100.0	35.1	2.1	39.9	13.2	9.8
운수·창고	100.0	36.2	7.1	44.6	9.1	3.0
정보통신	100.0	37.7	2.6	33.0	10.2	16.4
제조업	100.0	39.3	1.9	48.2	7.2	3.4
광업	100.0	39.8	1.7	32.0	10.2	16.3
전문·과학	100.0	40.2	1.8	36.4	9.6	12.1
전기·가스·증기	100.0	41.3	2.8	20.4	9.9	25.6
건설	100.0	43.7	1.3	41.2	8.7	5.0
수도·하수·폐기물	100.0	46.3	1.2	41.5	5.7	5.3
전체	100.0	33.9	5.4	39.2	11.1	10.4

* 주: 2019~2020년 모두 매출액이 없거나, 2019~2020년 동일기업으로 연결되지 못한 기업.

Ⅲ. 종사자수 변화

“모든 기업규모에서 전년 대비 종사자수 감소, 특히 소기업에서 종사자수 감소가 큼”

- 종사자수 변화를 보면 중소기업은 3.9%, 대기업은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종사자수 감소율이 대기업보다 컸다.
- 기업규모별로 종사자수 변화를 살펴보면 소상공인은 1.8%, 소기업은 8.7%, 중기업은 3.5% 감소하여, 모든 기업규모에서 종사자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기업규모별 종사자수

(단위: 개, 명, %)

2019년 존재기업		종사자수		
기업규모	기업수	2019년	2020년	증감
전체	6,898,958	21,254,650	20,523,266	-3.4
소상공인	6,445,316	9,223,529	9,058,076	-1.8
소기업	344,611	4,294,995	3,919,206	-8.7
중기업	100,276	3,755,385	3,622,445	-3.5
중소기업	6,890,203	3,980,741	3,923,539	-3.9
대기업	8,755	17,273,909	16,599,727	-1.4

- 산업별로 살펴보면 숙박·음식점(-14.5%), 예술·스포츠·여가(-10.7%), 개인서비스(-7.0%) 등의 산업에서 중소기업 종사자수 감소율이 컸다. 종사자수 증감 방향과 매출액 증감 방향은 대부분 산업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표 9] 산업별 중소기업 종사자 수

(단위: 개, 명, %)

2019년 존재기업		종사자수		
산업	기업수	2019년	2020년	전년대비증감
숙박·음식점	816,184	1,827,996	1,562,963	-14.5
예술·스포츠·여가	145,326	249,204	222,606	-10.7
개인서비스	375,707	594,094	552,448	-7.0
사업시설관리	150,309	1,042,251	975,900	-6.4
광업	2,647	11,277	10,583	-6.2
도소매	1,661,902	3,265,426	3,121,863	-4.4
건설업	484,270	1,779,686	1,722,052	-3.2
보건·사회복지	77,731	646,132	627,093	-2.9
교육서비스	223,578	351,652	342,724	-2.5
부동산업	1,167,258	1,405,825	1,381,574	-1.7
제조업	576,574	3,315,190	3,264,708	-1.5
운수창고	614,193	1,055,470	1,045,699	-0.9
금융보험	53,380	139,388	139,106	-0.2
전기·가스·증기	94,188	99,016	99,617	0.6
전문·과학·기술	222,078	785,088	798,823	1.7
농림어업	88,446	144,435	147,603	2.2
수도·하수·폐기물	11,294	84,521	86,663	2.5
정보통신	125,138	477,258	497,702	4.3
전체	6,890,203	17,273,909	16,599,727	-3.9

- 반면 교육서비스 산업은 매출액 감소율(-12.5%)에 비하여 종사자수 감소율(-2.5%)이 작았다. 교육서비스 산업은 코로나19로 매출액이 많이 감소한 것에 비해 종사자를 많이 줄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019~2020년 모두 활동*한 중소기업 중 숙박·음식점, 예술·스포츠·여가, 개인서비스 산업 등에서 평균 종사자수 감소”

* 생산활동을 유지하는 기업의 종사자수 변화를 보기 위하여 2019년과 2020년 모두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으로 종사자수 분석 (폐업기업 제외)

- 2019~2020년에 활동한 중소기업의 2020년 기업체당 종사자수(평균 종사자수)는 보건·사회복지(8.6명), 수도·하수·폐기물(8.5명),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8.2명)의 순으로 높으며, 전기·가스·증기(1.1명), 부동산업(1.3명), 개인서비스(1.6명)의 순으로 낮다.

[표 10] 2019~2020년 활동 기업의 평균 종사자수

(단위: 개, 명)

산업	기업수	종사자 수		평균 종사자(종사자수/기업수)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차이
보건·사회복지	72,358	616,997	622,158	8.5	8.6	0.1
수도·하수·폐기물	10,050	82,524	85,448	8.2	8.5	0.3
사업시설관리	114,571	950,916	941,860	8.3	8.2	-0.1
제조업	515,579	3,174,669	3,209,047	6.2	6.2	0.1
광업	1,944	10,197	9,967	5.2	5.1	-0.1
정보통신	91,780	436,772	464,964	4.8	5.1	0.3
전문·과학·기술	174,010	724,046	752,003	4.2	4.3	0.2
건설업	417,720	1,686,647	1,661,132	4.0	4.0	-0.1
금융보험	33,221	117,680	119,280	3.5	3.6	0.0
도소매	1,280,589	2,801,745	2,764,760	2.2	2.2	0.0
숙박·음식점	661,443	1,555,154	1,420,543	2.4	2.1	-0.2
농림어업	56,885	110,898	115,791	1.9	2.0	0.1
운수창고	539,888	972,698	982,262	1.8	1.8	0.0
교육서비스	171,861	291,022	295,157	1.7	1.7	0.0
예술·스포츠·여가	109,034	203,186	189,205	1.9	1.7	-0.1
개인서비스	317,713	520,785	503,617	1.6	1.6	-0.1
부동산업	779,299	1,006,812	1,006,262	1.3	1.3	0.0
전기·가스·증기	60,726	65,415	66,239	1.1	1.1	0.0
전체	5,408,671	15,328,163	15,209,695	2.8	2.8	0.0

- 2019~2020년에 활동한 중소기업 중 숙박·음식점, 예술·스포츠·여가, 개인서비스 산업의 평균 종사자수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이들 산업은 코로나19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산업으로, 기업이 존속한 경우에도 종사자수를 줄이며 기업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IV. 기업규모 변화

개별기업 단위에서 2019년 기준 기업규모와 2020년 기준 기업규모를 비교하여, 2019년과 2020년의 기업규모 이동 현황을 분석함

“예술·스포츠·여가, 숙박·음식점 산업은 소기업·중기업·대기업에서 소상공인으로 이동한 비율이 높음”

- 2019년 소상공인에서 2020년 소기업·중기업·대기업으로 기업규모가 상승한 기업은 7만 3,573개인 반면 소기업·중기업·대기업에서 소상공인으로 하락한 기업은 7만 8,657개로 기업규모가 상승한 기업보다 하락한 기업이 더 많다.
- 특히 예술·스포츠·여가, 숙박·음식점, 사업시설관리서비스, 개인서비스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대상이 된 산업에서는 타 산업에 비해서 기업규모가 상승한 기업보다 기업규모가 하락한 기업이 많았다.
- 2020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를 보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숙박·음식점(소상공인) 산업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2.8%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9~2020년 기업규모 이동을 분석한 결과, 이러한 변화는 소상공인이 성장한 결과라기보다는 2019년에 소기업·중기업·대기업이었던 기업이 매출액 감소로 2020년에 소상공인으로 이동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인다.
- 2019년 존재 소상공인은 매출액이 1.5% 증가하였으나, 예술·스포츠·여가(-23.0%), 교육서비스(-13.5%), 숙박·음식점(-11.2%) 등의 산업에서는 매출액이 감소하였다.

[표 11] 2019년 대비 2020년 산업별 기업규모 이동 현황

(단위: 개, %)

산업	(A.상승)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B.하락)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소상공인	A.상승/B.하락 비율 (A/B*100)
예술·스포츠·여가	793	1,406	56.4
숙박·음식점	10,969	19,165	57.2
사업시설관리	2,455	3,518	69.8
개인서비스	1,484	2,036	72.9
보건·사회복지	2,564	3,091	83.0
전기·가스·증기	51	61	83.6
도소매	19,066	21,716	87.8
수도·하수·폐기물	379	414	91.5
광업	36	39	92.3
교육서비스	1,792	1,708	104.9
건설업	8,199	7,512	109.1
부동산업	2,906	2,485	116.9
전문·과학·기술	4,957	4,226	117.3
정보통신	2,789	2,267	123.0
금융보험	589	473	124.5
농림어업	855	586	145.9
제조업	11,492	7,186	159.9
운수창고	2,197	768	286.1
전체	73,573	78,657	93.5

[표 12] 2019년 대비 2020년 산업별 소상공인 매출액 증감

(단위: %)

	전체	예술·스포츠· 여가	교육 서비스	숙박· 음식점	보건· 사회복지	개인 서비스	제조업
매출액 증감율	1.5	-23.0	-13.5	-11.2	-5.6	-4.9	-3.0

V. 시사점

- 본 분석은 매출액 등의 변동에 따른 기업규모 이동 효과를 통제하고, 코로나19가 중소기업에 미친 영향을 개별기업 단위에서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 분석결과를 보면, 2019년 존재 중소기업의 2020년 매출액은 예술·스포츠·여가(-18.1%),

숙박·음식점(-14.6%), 교육서비스(-12.5%) 등의 산업에서 전년대비 감소하여 전체 산업의 매출액은 -1.0%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인 매출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증가한 기업이 33.9%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9년 존재 중소기업의 2020년 종사자수는 모든 기업규모에서 전년대비 감소하여 -3.9%를 나타냈으며, 매출액보다 감소율이 더 컸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소기업은 매출액보다 종사자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 또한 매출액과 종사자수 변동에 따라 기업규모가 이동하였는지를 분석한 결과, 예술·스포츠·여가, 숙박·음식점, 사업시설관리, 개인서비스 등의 산업에서는 기업규모가 상승한 기업보다 하락한 기업이 많았다.
- 매년 매출액과 종사자수가 변동되어 기업규모가 이동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 규모별로 경제적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 기본통계를 활용하여 본 분석과 같은 동태적 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코로나19가 중소기업에 미친 영향



- 「중소기업 기본통계」는 기업통계등록부(통계청)를 기반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작성하는 국가승인통계이며, 본 분석은 정책적 활용 등을 위해 중소기업 기본통계를 이용해 코로나19가 개별기업에 미친 영향을 상세히 분석한 결과임



데이터 경제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변준석
통계개발원 사무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데이터 경제(datanomics)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경제는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데이터 경제는 데이터가 기업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생산요소, 그것도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가 되는 경제구조를 의미합니다. 데이터 경제는 크게 데이터 산업과 일반 산업의 데이터화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산업은 데이터를 수집·저장·관리·분석 및 유통하는 데이터 생애주기에 따른 전통적인 데이터 산업을 의미합니다. 반면 일반 산업의 데이터화는 데이터 활용에 의존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산업과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기존 사업모델의 부가가치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경제 활동을 의미합니다. 데이터 경제가 구체적으로 우리 경제·사회의 어떠한 부문과 관련되어 논의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데이터 경제 관련 국제기구 및 국내외 연구보고서에 대한 워드 클라우드 및 단어 간 유사도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 경제 측정을 위한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습니다. 데이터 경제를 핵심, 협의, 광의로 구분하였고, 디지털 기술 발전 정도는 디지털화(digitization), 디지털 일상화(digitalization),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데이터경제 측정기반 구축을 위한 프레임워크 기초연구」(통계개발원, 2021)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I. 들어가며

요즘 각종 매체를 접하다 보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과 함께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Everything), 빅데이터(Big Data),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메타버스(Metaverse) 같은 용어를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용어들이 의미하는 바는 다르지만 이 용어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내용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래서 현재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신기술 기반의 경제·사회적 변화를 알리는 증거라는 점 아닐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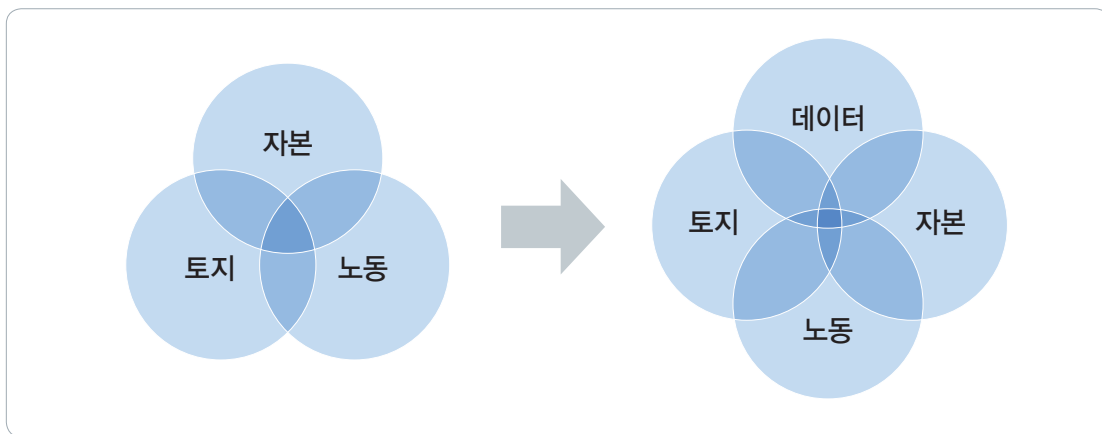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는 ‘무엇’이 변화하는지, 그 핵심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대응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변화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변화의 원동력은 무엇인지, 패턴은 어떠한지 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변화의 특성을 확인해야 앞으로 이 변화가 미칠 영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변화와 우리의 대응을 ‘측정’해야 합니다.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다”라는 피터 드러커의 말처럼 미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정확한 측정은 필수입니다.

II. 데이터 경제란?

데이터 경제(datanomics)의 정의는 다양합니다. 대한민국 정책DB에서는 데이터의 활용이 다른 산업 발전의 촉매 역할을 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경제라고 정의합니다. 뉴먼(2011)은 데이터 경제는 빅데이터, 오픈데이터, 연결데이터 등 데이터로 파생되는 경제로 정의합니다. 또한 IBM(2016)과 한국정보화진흥원(2018)에서는 기업에서 이용 가능한 데이터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증가하면서 기업들 사이에서 더 많은 데이터가 교환됨으로써 발생하는 가치 창출의 경제로 정의합니다(4차산업혁명위원회, 2018, 재인용). 이렇게 다양한 정의에서 공통점을 찾아보면 데이터 경제는 데이터가 경제활동의 중요한 생산요소로 사용되는 경제구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백인걸 등, 2018).

데이터 경제는 이상과 같이 여러 가지로 정의되고 있습니다만 그 어떤 정의도 그 의미가 명쾌하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데이터가 하나의 ‘생산요소’ 그것도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라는 것만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림 1] 생산 요소의 변화



만약 데이터 경제의 정의만으론 데이터 경제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간단한 사례를 통해 이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 ‘데이터 경제’라는 말을 들으면 데이터를 수집·처리·저장·유통하는 데이터 산업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데이터 산업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처리, 분석, 유통, 활용 등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데이터 관련 제품을 판매하거나 기술을 제공하는 데이터솔루션, 데이터 구축, 데이터컨설팅 비즈니스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서비스 비즈니스로 구분됩니다. 즉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서비스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4차산업혁명위원회, 2018, 재인용).

또 다른 분야는 비(非)데이터 산업 분야에서 데이터 흐름을 창출하고, 그 데이터가 기업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생산요소가 되거나 비즈니스 모델에 유의미한 부가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제 활동을 의미합니다. 아마존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제품 주문·배송·결제 등의 등 고객 경험의 전 과정에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분석하여 고객만족도를 높이려 했습니다. 그러한 노력 덕분에 더 많은 고객을 아마존 생태계로 끌어들이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 경제는 데이터가 가장 핵심적인 생산요소인 경제이며, 그 범위는 전통적인 데이터 산업뿐 아니라 일반 산업까지 포함됩니다. 현재는 핵심 생산요소가 금융인 금융 자본주의 시대라면, 데이터 경제 시대에는 핵심 생산요소가 데이터가 됩니다.

본격적인 데이터 경제 시대에 앞서, 생산자 또는 기업은 디지털 및 인공지능 기술 기반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기업 고유의 생태계를 구축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을 유지하는 등 어떠한 형태로든 고객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업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III. 디지털 경제와의 관계

데이터 경제를 이야기할 때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와는 어떠한 관계인가?”, “디지털 경제와 무엇이 다른가?”입니다. 두 용어 모두 최신 기술 및 산업 경향을 반영하고 있으며, 비교적 최근에 나온 개념으로 그 의미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고유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와 달리 디지털은 고도화된 소프트웨어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기반 기술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술은 그 자체만으로는 지속해서 발전시키고 보편화해 나가야 할 대상이지 가치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데이터는 그 자체로도 사회적 가치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데이터는 형태, 크기, 출처 등 여러 가지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출처가 사람이라면 그 데이터가 민감 정보인지, 단순 정보인지에 따라 사회적 가치판단의 여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데이터 소유권도 문제입니다. 최근 싸이월드 운영사인 싸이월드제트¹⁾는 이용약관에 “회원의

1) 지난 4월 추억의 SNS인 싸이월드 미니홈피가 2019년 서비스 종료 3년 만에 부활했다. 3,200만 명에 달하는 회원들의 사진과 동영상도 복구되면서 그사이 세상을 떠난 고인들의 사진과 동영상도 되살아났다. 미니홈피에 남아 있는 고인의 흔적들은 당사자가 아니면 접근할 권한이 없다. 유족이라도 말이다. 싸이월드 부활 후 고인의 사진과 동영상을 넘겨 달라는 유족의 요청이 잇따르자 최근 싸이월드 운영사 싸이월드제트가 이용약관을 수정해 ‘디지털 상속권 보호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 고인이 된 회원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유족에게 제공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SNS에 남아 있는 데이터를 디지털 유산으로 보고 유족에게 상속하는 게 맞는다. 아니면 유족이라도 고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조선일보, 2022. 7. 1.).

사망 시 회원이 게시한 게시글의 저작권은 별도의 절차 없이 그 상속인에게 상속된다”라는 조항을 포함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망 회원의 저작물이 단순히 디지털 유산인지 고인의 프라이버시로서 보호되어야 할 대상인지에 대한 논란입니다. SNS 게시물을 디지털 형태의 사물로 인지한다면 단순한 유산이 될 수 있지만, 민감한 사안이나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로 본다면 사후 프라이버시도 중요할 것입니다.

데이터 경제는 디지털 기술 기반 위에서 구현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경제와 데이터 경제를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경제는 기술과 물리적 변화를, 데이터 경제는 보이지 않는 내적 의미와 가치를 강조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IV. 데이터 경제 및 디지털 경제 텍스트 분석²⁾

데이터 경제 관련 단어 및 분야를 파악하고자 국내외 관련 보고서를 대상으로 텍스트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데이터 경제 및 디지털 경제 연관 단어를 비교·분석했습니다.

자연어 처리를 통한 텍스트 분석은 단어의 의미를 벡터로 변환해 그 의미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는 Doc2vec³⁾을 활용하였습니다. 이 문장 분석 방법으로 단어 간 유사도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분석 방법은 ‘비슷한 위치에 등장하는 단어들은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는 분산 표현 가정에 기반합니다. 벡터로 변환된 값은 벡터 간 코사인 유사성으로 해당 단어들의 의미론적 유사성을 추론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단어를 벡터로 임베딩하면 다음과 같은 단어 간 연산이 가능합니다.

- 고양이 + 애교 = 강아지
- 한국 - 서울 + 도쿄 = 일본
- King - Man + Woman = Queen

2) 분석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데이터경제 측정기반 구축을 위한 프레임워크 기초연구(통계개발원, 202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Doc2Vec는 Word2Vec의 확장된 임베딩 방법입니다. 단어뿐 아니라 문서의 아이디어까지 벡터화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두 문서에 등장하는 단어가 다르더라도 벡터들이 비슷하다면 두 문서의 벡터는 서로 비슷해집니다. 분석모델은 distributed memory(DM=1)를 사용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한 국내 문헌은 데이터 경제, 디지털 경제 관련 국내 주요 참고문헌 64종입니다. 여기에 활용된 5개 이상 단어로 구성된 문장은 총 3만 7,249개 문장입니다.

관련 단어를 대상으로 단어 출현 횟수에 따라 크기가 비례하는 워드 클라우드를 실행하였습니다. [그림 2]의 워드 클라우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장 자주 출현한 단어는 ‘데이터’, ‘기술’, ‘산업’, ‘서비스’, ‘디지털’, ‘기업’, ‘활용’, ‘정보’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정보’, ‘기술’, ‘혁신’ 등 우리가 쉽게 데이터, 디지털과 관련지을 수 있는 일반적인 단어뿐 아니라 ‘정책’, ‘정부’, ‘기반’ 등 정부의 역할과 관련된 단어도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림 2] 국내문헌 워드 클라우드 및 상위 출현 20개 단어



상위 20개 단어			
1	데이터	11	분석
2	기술	12	생산
3	산업	13	정책
4	서비스	14	스마트
5	디지털	15	분야
6	기업	16	제공
7	활용	17	정부
8	정보	18	개발
9	경제	19	기반
10	혁신	20	산업혁명

[표 1]은 국내 문헌 텍스트 분석 결과입니다. ‘데이터’는 ‘개방’, ‘오픈’, ‘수집’, ‘공동’, ‘유통’, ‘거버넌스’, ‘개인정보’의 순으로 유사도가 높은 단어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은 ‘디지털화’, ‘인터넷’, ‘패러다임’, ‘가속’, ‘시작’, ‘격차’의 순으로 유사도가 높았습니다. 데이터에서 디지털의 특성을 제외하면 ‘가공’, ‘수집’, ‘저장’ 등 순수한 데이터의 특성과 관련된 단어의 유사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개방’, ‘거버넌스’, ‘개인정보’, ‘신뢰’ 등 사용자 중심의 단어들이 유사도가 높은 반면 디지털은 ‘디지털화’, ‘인터넷’, ‘클라우드’, ‘발전’ 등 성과 및 발전 관련 단어와 유사도가 높았습니다.

[표 1] 국내 문헌 텍스트 분석 결과

	데이터	디지털	데이터 + 디지털	데이터 - 디지털
1	개방	디지털화	포괄	가공
2	오픈	인터넷	활성화	수집
3	수집	패러다임	공공	저장
4	공공	가속	거버넌스	데이터베이스
5	유통	시작	강조	공개
6	거버넌스	격차	개방	개인정보
7	개인정보	포괄	오픈	식별
8	활성화	공통	개념	실시간
9	가공	연구	프레임워크	개방
10	데이터베이스	중요성	클라우드	거래

[그림 3]은 해외 문헌에 대한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입니다. ‘data economy’, ‘digital economy’와 관련하여 가장 자주 쓰이는 단어는 ‘data’, ‘digital’, ‘services’, ‘economy’, ‘ict’, ‘countries’, ‘value’, ‘use’, ‘information’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림 3] 해외 문헌 워드클라우드 및 상위 출현 20개 단어



상위 20개 단어			
1	data	11	internet
2	digital	12	business
3	services	13	products
4	economy	14	goods
5	ict	15	based
6	countries	16	economic
7	value	17	platforms
8	use	18	access
9	information	19	growth
10	new	20	trade

[표 2]는 해외 문헌 분석 결과입니다. ‘data’의 경우 ‘flows’, ‘cross’, ‘personal’, ‘big’, ‘collection’, ‘privacy’의 순으로 유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igital’의 경우에는

‘framework’, ‘common’, ‘definitions’, ‘measurement’, ‘paper’, ‘transformation’, ‘digitalization’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data’에서 ‘digital’의 특성을 제외한 경우에는 ‘personal’, ‘reported’, ‘revenue’, ‘companies’, ‘big’, ‘tax’의 순으로 단어 간 유사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data’는 국내 문헌과 마찬가지로 ‘personal’, ‘privacy’, ‘protection’, ‘value’등 비교적 사용자(사람) 중심의 단어가 많았다면, ‘digital’의 경우 ‘framework’, ‘economy’, ‘core’, ‘focus’, ‘measurement’, ‘transformation’ 등 경제나 비즈니스 관련 단어가 많았습니다.

[표 2] 해외 문헌 텍스트 분석 결과

	data	digital	data+digital	data-digital
1	flows	framework	associated	personal
2	cross	common	various	reported
3	personal	definitions	creation	revenue
4	big	measurement	flows	companies
5	collection	paper	cross	big
6	privacy	transformation	focus	tax
7	protection	digitalization	nature	individual
8	companies	economy	analysis	large
9	value	core	important	country
10	example	section	different	users

V. 데이터 경제 측정 프레임워크

그렇다면 데이터 경제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데이터 경제는 고정되었다기보다는 지속해서 발전하는 상태입니다. 또한 디지털 경제와 마찬가지로 국가별로 데이터 경제의 발전 단계가 달라서 보편적·일반적 측정 방법을 제안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OECD가 G20에 권고한 유연한(계층적) 접근 방식에 따라 다음 그림과 같이 개념적 데이터 경제 측정 프레임워크(안)을 제안합니다.

[그림 4] 개념적 데이터경제 측정 프레임워크

거버넌스		
데이터경제	핵심	데이터 처리 · 관리 · 판매 · 서비스에 직접 관여
	협업	데이터 활용에 의존하는 경제활동
	광의	데이터 활용으로 유의미하게 부가가치가 증가되는 경제활동
데이터 단순 활용		데이터 활용 일상화
디지털화 (digitization)		데이터 활용 일상화 (digitalization)
		데이터 활용 지능화
		디지털 전환 (digital transformation)

데이터 경제는 데이터 활용 상태에 따라 핵심, 협업, 광의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핵심(Core) 영역은 데이터를 직접 다루어 매출을 올리는 경제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른바 데이터 산업입니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데이터 산업 분류에 따르면 ① 데이터 처리 및 관리 솔루션 개발 · 공급업 ② 데이터 구축 및 컨설팅 서비스업 ③ 데이터 판매 및 제공 서비스업 등이 있습니다. 협업(Narrow) 영역은 핵심 영역과 함께 데이터 활용에 의존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합니다. 보통 데이터 자산 기반 비즈니스 모델로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 활동을 말합니다. 데이터 활용이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광의(Broad) 영역은 협업 영역을 포함하며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이 유의미하게 강화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코스트코는 기존의 비즈니스에 각국의 생산 및 소비자 데이터를 분석 · 활용함으로써 부가가치 창출은 물론이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는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할 제도뿐 아니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규제조건까지 포함합니다. 활성화 제도(조건)로는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개방, 데이터 활용 인프라 등이 있습니다. 데이터 규제 조건에는 데이터 보호 및 보안, 개인정보 보호 등이 있습니다.

데이터 경제를 측정하기 위해 데이터 활용단계와 디지털 기술 활용단계를 구분해서 살펴 보아야 합니다. 데이터 활용도뿐 아니라 데이터 분석에 활용되는 디지털 기술 수준이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활용단계는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순 활용단계는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때만 데이터를 일회성으로 분석하고 활용하는 단계입니다. 둘째, 일상화 단계는 일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활용하는 단계입니다. 셋째, 지능화 단계는 인공지능을 통해 자동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단계입니다.

디지털 기술 활용단계 또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Savic, 2019). 첫째, 디지털화(digitization) 단계는 필름 카메라가 디지털카메라로 바뀐 것처럼 아날로그 정보를 단순히 디지털 정보로 바꾸는 단계를 말합니다. 둘째, 디지털 일상화(digitalization) 단계는 키오스크 제품 주문과 같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비즈니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단계는 제품을 서비스와 결합하여 구독 경제 모델을 구현하거나 소비자직접판매(D2C)⁴⁾와 같이 디지털을 이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VI. 결론

4차 산업혁명 이후 세계가 변화하는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개개인들의 선호도와 세계관에 따라 다양성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후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진 미래 사회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데이터 경제 시대에 들어선 현시점에 변화의 방향과 속도를 정확히 측정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발전된 디지털 기술 기반 위에 데이터 중심 경제로의 이행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같은 고도화된 디지털 활용이 보편화되지 않은 지금은 디지털 기술 자체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이 점차 보편화될수록 고유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의 중요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업은 자체적으로

4) D2C란 Direct to Consumer의 약자로 브랜드가 오프라인 및 온라인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비자와 만나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말한다. D2C를 늘리면 소비자 반응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맞춤 공급계획이 가능하고 중간유통마진을 줄일 수 있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매거진, 2021.9.10.).



데이터를 확보·활용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 없이는 기업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 활동에서 데이터 수집·활용은 점점 더 핵심적인 과업이 될 것입니다.

본 연구는 데이터 경제의 개념을 핵심, 협의, 광의로 확장하고 개념별 데이터 경제의 측정 방안을 제시합니다.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하여 개념별 구체적 측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속하고 능동적인 데이터 활용은 비단 경제 영역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데이터 경제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참고문헌

- 백인걸, 최영상(2018), 데이터경제의 등장과 기대효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이슈리포트 18-3호
- 4차 산업혁명위원회(2018), 데이터 경제 기반 정책연구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21). 데이터산업백서
- 조선일보(2022.7.1.), “싸이월드가 쏘아올린 ‘디지털 유산 상속’…애플·구글의 해법은?”, 검색일 : 2022.7.1.
https://jobsn.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6/29/2022062901653.html,
-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매거진(2021.9.10.) “나이키의 디지털전환 성공의 핵심은?”,
<https://brunch.co.kr/@innofit/116>, 검색일: 2022.10.26.
- Savic, Dobrica. (2019). From Digitization, Through Digitalization, to Digital Transformation.



통계데이터센터 알아보기

오승철

통계데이터기획과 사무관
ohsc333@korea.kr

최진성

통계데이터기획과 주무관
cjs6882@korea.kr



Q&A

최근 행정통계자료, 민간자료 등 각종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 및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통계청에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통계데이터센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관심과 더불어 통계데이터센터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어떤 일을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어떤 데이터를 이용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 이용료는 어떻게 되는지 등과 같은 질문도 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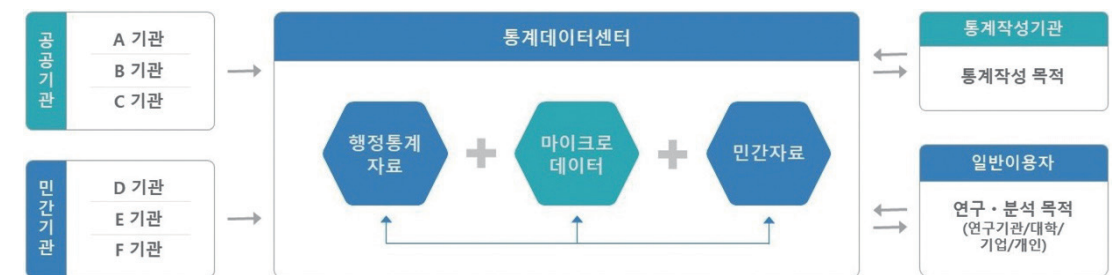


통계데이터센터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A1. 통계데이터센터는 이용자가 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통계자료, 민간자료 및 외부 반입자료와 연계·융합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구축된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또한 통계데이터센터는 보안이 엄격한 시설에서 데이터를 자유롭게 연계·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안심존입니다.

* 중앙행정기관 제1호 결합전문기관 지정(2020년 11월 2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통계데이터센터 개념도 〉



통계데이터센터는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A2. 통계데이터센터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 신청 및 이용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용대상자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승인통계 작성을 위해 이용하는 통계작성기관
- 정책 결정 및 분석을 위해 이용하는 공공기관
- 연구 분석을 위해 이용하는 연구자 및 일반 이용자

이용기간은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이용기간 연장이 필요할 때는 1회에 한하여 2주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연구 및 분석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로 협의(심의)를 거친 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통계데이터센터에서는 어떤 일(서비스)을 하나요?

A3. 이용자가 데이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분석 플랫폼 제공 서비스
 - 분석시스템 · 통계패키지 제공
 - 통계자료(통계등록부 · 통계기초자료) 및 민간자료, 이용자 반입자료 연계 · 분석
2. 전문가 분석지원서비스
 - 분석 경험이 없는 이용자를 위한 데이터 분석 지원
 - 센터 이용 상담 및 데이터 분석 자문
3. 주문형 분석서비스
 - 시간 및 거리상 센터 방문이 어렵거나 직접 자료 분석을 하기 힘든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 센터 이용자료를 활용하여 연계 · 분석 후 결과표 제공
4. 명부서비스
 - 승인 통계를 대상으로 현장조사가 가능하도록 명부 제공
 - 표본설계 여부에 따라 주문형 분석서비스와 센터방문형 분석서비스로 구분하여 명부 제공
5. 이용자 교육서비스
 - 이용자 교육 홈페이지 운영
 - 통계분석 프로그램 및 분석사례 교육
 - 매년 통계데이터 분석 활용대회 개최



통계데이터센터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나요?

A4. 통계데이터센터에서 현재 제공하는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자료 18종
2. 민간자료 35종
3. 인가된 통계기초자료(별도의 MDIS 이용 승인을 받은 후 이용 가능)

〈 통계데이터센터에서 이용 가능한 행정자료 및 민간자료 데이터 목록 〉

구분	이용 가능한 데이터 목록(2022. 10. 31. 기준)	
행정자료 (18종)	- 기업통계등록부(사업등록번호 기준) - 기업통계등록부_분기(사업등록번호 기준) - 사업장기초DB(법인) - 종사자 · 기업체연계 DB - 인구가구통계등록부(가구) - 인구동태코호트DB - 농업DB - 어업DB - 기업통계등록부(대표자 기준) - 기업통계등록부_분기(대표자 기준) - 사업장기초DB(4대보험) - 인구가구통계등록부(인구) - 주택통계등록부 - 아동가구통계등록부 - 임업DB - 취업활동 통계등록부(취업활동) - 취업활동 통계등록부(고용) - 격자통계	
민간자료 (35종)	- 성 · 연령별 유동인구 - 요일별 유동인구 - 성 · 연령별 주거인구 - 코로나19 방문인구정보 - 가구소득 - 업종별 카드매출 - 성 · 연령별 카드매출2(해외) - 신용통계정보(소득) - 인구이동정보(전입) - 인구이동정보(통근) - 영업 중 업소 - 모바일상품권거래 정보 - 표준공시지가 - 공동주택정보 - 기초정보 인구집중유발시설 - 시 · 군 · 구별 차량등록대수 - 법정동코드 - SNS 데이터 - 시간대별 유동인구 - 성 · 연령별 유입인구 - 성 · 연령별 직장인구 - 코로나19 방문인구정보(유입지null) - 성 · 연령별 카드매출1 - 성 · 연령별 카드매출2(국내) - 신용통계정보(대출및연체) - 신용통계정보(카드소비) - 인구이동정보(전출) 1000대 상권정보 - 온라인가격 정보 - 구매상품정보 - 주택(단독/다세대/기타) - 건축물정보 - 도로별 차량통행량 - 행정동코드 - 소지역코드	



통계데이터센터는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A5. 통계데이터센터는 대전을 주축으로 지역센터 8개소를 운영 중이며, 이용 승인을 받은 이용자는 전국 지역센터 어디서든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역센터는 서울(4개소), 부산(1개소), 대구(1개소), 광주(1개소), 세종(1개소) 지역에서 운영 중이며, 각 센터의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센터명	좌석수	개설시기	위치
대전	34	18/11	대전 서구 통계센터 13층
중구(서울)	10	18/11	서울 중구 부영빌딩 7층 데이터 안심존
상암(서울)	5	21/09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 스마트움 15층
강남(서울)	11	22/06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 별관 4층
국회(서울)	3	22/09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1층
부산	12	18/07	부산 연제구 부산통합청사 행정동 1층
대구	15	21/03	대구 수성구 SW융합비즈센터 2층
광주	12	20/03	광주 서구 광주통합청사 4층
KDI(세종)	3	22/03	세종 한국개발연구원(KDI) 1층



통계데이터센터 이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6. 이용자는 데이터 분석을 위해 승인된 자료 및 장비를 반입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계데이터센터는 보안이 엄격한 시설로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철저히 막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분석 결과물은 비식별화 조치를 한 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계데이터센터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data.kostat.go.kr)를 통한 회원 가입 및 이용 신청
2. 이용 가능 여부 검토(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통보)
* 마이크로데이터, 민간자료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통보
3. 승인
4. 이용료 납부 및 센터 좌석 배정
5. 통계데이터센터 방문
6. 자료 및 장비 반입
7. 자료 연계 및 분석(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비식별화 처리 후 제공)
8. 분석결과 반출 신청
9. 자료반출 평가위원회 검토(반출 기준에 따른 비식별화 처리 여부 검토,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분석결과 반출 승인 여부 통보)
10. 승인 및 반출(자료는 통계데이터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11. 분석결과 제출 및 기술노트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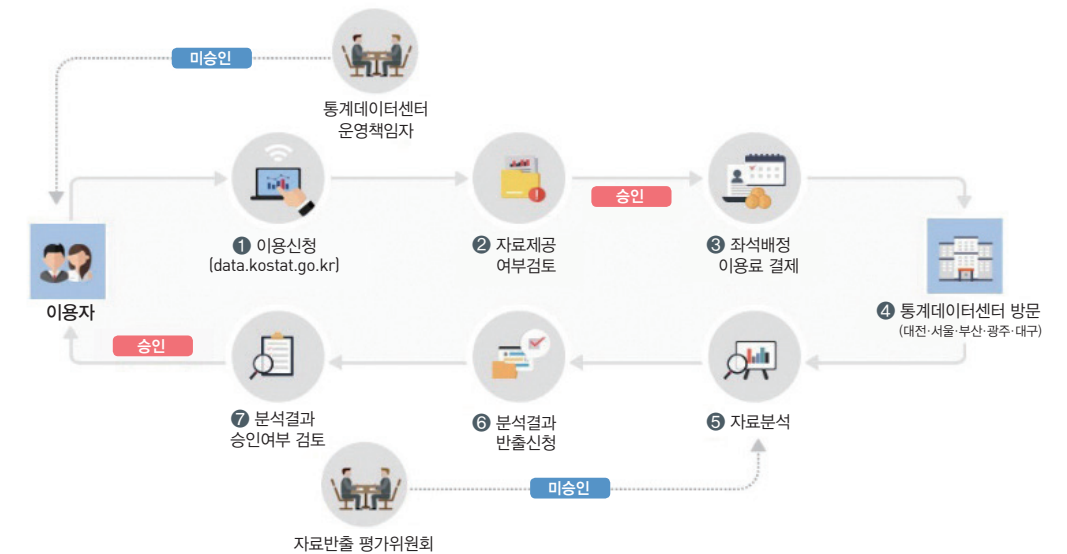
통계데이터센터 이용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7. 통계데이터센터 이용 신청은 SDC 통계데이터센터 홈페이지(data.kostat.go.kr)에서 할 수 있으며, 이용 신청을 하는 방법은 제공 서비스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1. 분석센터 이용 신청
2. 주문형서비스 이용 신청
3. 명부서비스 이용 신청
 - 센터를 통한 명부서비스(표본 미설계) 이용
 - 주문형서비스를 통한 명부서비스(표본설계 완료) 이용

각 서비스의 이용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석센터 이용 신청 방법



1	이용자	홈페이지를 통한 이용 신청 ▶ 서약서 및 준수사항 확인 ▶ 신청자료 및 항목 선택 ▶ 신청정보 입력 (연구계획서 등록, 공동연구자, 자료반입, 장비반입 신청 등)	3	통계센터	이용수수료 납부 및 센터좌석배정 ※ 2022.12월까지 한시적 무료이용
2	통계센터	자료제공여부 검토	4	이용자	센터방문 및 자료분석
			5	이용자	분석결과 반출 신청
			6	통계센터	분석결과 반출 승인여부 검토
			7	이용자	반출결과 다운로드



▶ 주문형서비스 이용신청 방법

- 주문형서비스는 시간 및 거리상 센터 방문이 어렵거나 직접 자료 분석을 하기 힘든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 센터 이용자료를 활용하여 연계·분석 후 이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결과 제공



1	이 용 자	홈페이지를 통한 이용 신청 ▶ 서약서 및 준수사항 확인 ▶ 신청자료 및 항목 선택 ▶ 신청정보 입력 (연구계획서 등록, 예시결과표 등록 등)
2	통계센터	전문가 상담을 통한 분석조건 및 결과표 확정
3	통계센터	생성가능한 자료에 한하여 이용승인 및 기간 산출
4	이 용 자	자료분석 및 자료생성
5	이 용 자	이용료 납부
6	통계센터	분석결과 반출 승인여부 검토
7	이 용 자	반출결과 다운로드



▶ 명부서비스 이용 신청 방법

● 분석센터를 통한 명부서비스(표본 미설계) 이용

1	이 용 자	공문발송 - 승인통계, 승인종인 통계에 한함 - 요청자료, 이용목적, 자료이용 기관 및 인원 등을 포함
2	이 용 자	홈페이지를 통한 이용 신청 ▶ 서약서 및 준수사항 확인 ▶ 신청자료 및 항목 선택 ▶ 신청정보 입력 (연구계획서, 파기서약서, 공동연구자, 이용기간, 이용장소 등)
3	통계센터	이용승인 및 좌석배정
4	이 용 자	표본설계 및 표본에 대한 명부작업
5	이 용 자	반출신청 및 분석결과 반출 승인여부 검토
6	이 용 자	반출결과 다운로드
7	이 용 자	자료이용 완료 후 파기확인서 등록

● 주문형서비스를 통한 명부서비스(표본설계 완료) 이용

1	이 용 자	공문발송 - 승인통계, 승인종인 통계에 한함 - 요청자료, 이용목적등을 포함
2	이 용 자	홈페이지를 통한 이용 신청 ▶ 서약서 및 준수사항 확인 ▶ 신청자료 및 항목 선택 ▶ 신청정보 입력 (연구계획서, 파기서약서, 표본자료 등록 등)
3	통계센터	이용승인
4	이 용 자	등록된 표본에 대한 명부작업
5	통계센터	분석결과 반출 승인여부 검토
6	이 용 자	반출결과 다운로드
7	이 용 자	자료이용 완료 후 파기확인서 등록



통계데이터센터 이용 승인을 받은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8. 통계데이터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용자는 통계데이터센터에서 규정하는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통계데이터센터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이용 자료는 센터 내 지정 좌석에서만 분석 작업이 허용된다.
2. 신청서 기재사항 변경(수정) 시 운영책임자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3. 이용 신청 시 작성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제3자에게 양도, 대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다.
4. 보안서약서에 자필 서명을 한 자 외에는 자료 열람을 금지한다.
5. 분석 작업 시 인터넷이나 휴대폰, 개인 USB의 사용을 금지한다.
6. 특정 개인·법인·단체 등의 식별이 가능한 자료 분석은 행할 수 없다.(일부 제외)
7. 자료 분석과정에서 알게 된 개별자료 관련 사항에 대한 누설을 금지한다.
8. 올바른 분석기법을 사용하고, 통계적 오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9. 사전에 명시한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10. 통계청의 승인 없이 중간·최종 결과물을 무단 반출하거나 공표할 수 없다.
11. 승인된 분석결과물을 자료 인용 또는 공표 등 대외적으로 활용할 경우 통계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2. 반출 신청 자료 이외의 이용자료 일체는 이용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후에 삭제하는 것을 원칙(복구 불능)으로 하며, 다만 추후 이용이 필요한 사항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센터 운영책임자와 협의를 거쳐 삭제를 보류할 수 있다.
13. 이용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석결과물을 활용한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 운영책임자와의 협의를 거쳐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4. 통계청 요청 시 자료처리 및 분석과정, 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기술노트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5.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준수사항 위반 시 통계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통계데이터센터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나요?

A9.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는 통계데이터센터 이용활성화 방안에 따라 이용료를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지만, 2023년부터는 소정의 이용료를 내셔야 합니다.

통계데이터센터 이용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계데이터센터 이용료

1. 분석센터 이용료

이용 기간	1일	1주	2주	3주	4주	8주	12주	16주	20주	24주
이용료(만원)	5	22.5	42.5	60	75	132.5	180	217.5	245	262.5

※ 면제 및 할인 대상과 범위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data.kostat.go.kr)의 서비스 이용료를 참고 바랍니다.

2. 통계자료 분석(주문형) 서비스 이용료

가. (초급) 단순 분석 통계표 작성

나. (중급) 변수를 새로 생성하거나 별도 조건을 설정한 통계표 작성

다. (고급) 데이터 시계열 연계, 다른 데이터 간 연계 분석 등

〈 통계표 작성 단가 〉

기 준		단가(표 1개)		
		초급	중급	고급
표본자료 (통계조사)	표본 10만 미만	90,000원	135,000원	180,000원
	표본 10만 이상	140,000원	210,000원	280,000원
전수자료(통계등록부, 총조사 등) 및 민간자료		180,000원	270,000원	360,000원

※ 수수료 상한액: 20,000,000원

「통계연구」 원고모집

저널 「통계연구」는 국가기관인 통계청에서 직접 발간하는 국내 유일의 국가통계 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서, 국가통계의 정책적·학술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논문을 모집합니다. 국가통계와 관련하여 연구하시는 모든 분들의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논문주제 인구·사회·경제·보건 등 각종 국가통계를 이용한 분석 및 응용 연구
통계생산 작성 기법의 연구·개발 및 통계정책 제안 등

모집기간 연중

제출방법 “통계개발원 홈페이지 > 저널「통계연구」”의 한글(영문)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 제출(<https://stat.jams.or.kr>)

- * 제출서류: 한글(영문) 논문 파일, 논문투고 신청서, 저작권 양도동의서 및 개인 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 * 연구 장려를 위해 투고료, 심사료 및 게재료는 받지 않습니다.
- * 「통계연구」는 1차 심사기간을 원칙적으로 20일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발 간 연 4회(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20일)

문의사항 연락처: 통계개발원 연구기획실
042-366-7103
E-mail: statjournal@korea.kr



KOSTAT 통계플러스

Vol.20
2022. 12. winter

겨울호



통계청
통계개발원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통계센터 8F
전화 042-366-7103 팩스 042-366-7123
홈페이지 <http://sri.kostat.go.kr>